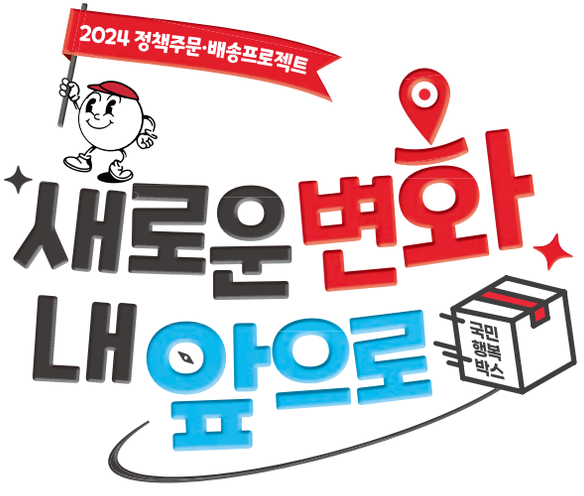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민의힘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국민행복박스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1 일•가족 모두 행복

일·가정 양립 혁신 | 촘촘한 돌봄·교육 환경 구축 |
저출생 문제 해결, 국가 책임 강화 | 돌봄 격차 해소

2 어르신 든든 내일

간병비 부담 경감, 국가 책임 강화 |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
어르신 건강한 생활 지원

3 민생 활력, 새로 희망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 근로환경 격차 해소 |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

4 소상공인·중소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 중소·벤처기업 지속성장 지원

5 미래산업 육성, 경제 재도약

신산업·미래산업 육성 | 투자활성화로 수출강국 도약 |
산업육성 위한 대못규제 개혁

6 지역 함께 성장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 의료 격차 해소 |
문화·디지털 격차 해소 | 지역경제 활력기반 구축

7 시민안전 건강지킴

민생·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응 강화 |
촘촘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스마트 국민안전

8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 자유평화 한반도

9 기후미래 녹색생활

기후위기 대응 강화 | 저탄소 전환 촉진 |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지원 |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10 모두 함께 동행

아동·청소년 | 청년 | 여성 |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
장애인 | 군인 | 제복공무원 | 사회적 약자 | 1인가구 | 반려동물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Contents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해묵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37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실시하겠습니다. 39
돈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40

일·가족 모두 행복

일·가정 양립 혁신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5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46

촘촘한 돌봄·교육 환경 구축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로 대한민국 가장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9
보육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50
늘봄학교 전면 확대로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채우겠습니다. 52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영·유아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53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54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55
교권과 학생인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겠습니다. 56

저출생 문제 해결, 국가책임 강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위기·세대갈등·성별갈등 해소하겠습니다. 59
저출생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60

돌봄 격차 해소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63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64
소아응급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65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주도 공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66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도서관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67

어르신 든든 내일

간병비 부담 경감, 국가책임 강화

간병비 걱정,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71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어르신의 주거와 소득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3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74
혼자사는 어르신께 안전 로봇을 배달합니다. 75

어르신 건강한 생활 지원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77
치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79
파크골프 등 어르신 친화형 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80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Contents

민생 활력, 새로 희망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85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습니다. 8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87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습니다. 88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만들겠습니다. 89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90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1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
대출을 성실 상환할수록 금융은 더욱 큰 힘이 됩니다. 93
가상자산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94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96

근로환경 격차 해소

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에게 빠짐없이 돌려드립니다. 99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00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지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01
안전한 중소기업, 함께 만들겠습니다. 102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겠습니다. 105
공정거래 통합분쟁조정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106
제조물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107
건설현장 부당이득, 국민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108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로 화물차주 처우와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109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국민과 택배 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10
프랜차이즈 맞춤형 납품대금 결제카드로 가맹본사와의 대금결제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111
모바일 기프티콘 더 편하게 사용하세요. 112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Contents

소상공인·중소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저금리, 장기 자금 공급 등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안정을 뒷받침합니다. 117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118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119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합니다. 120
소공인의 제조환경 개선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121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쉽게 정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22
새출발기금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3
소상공인의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24

중소·벤처기업 지속성장 지원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그린화를 지원합니다. 127
R&D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28
중소기업이 수출 확대의 선봉이 됩니다. 129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토록 현장의 애로를 해결합니다. 130
창업이 강한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131
손쉬운 창업! 누구나 부담없이 창업할 수 있습니다. 132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 기업금융을 적극 공급하겠습니다. 133
벤처·스타트업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34

미래산업 육성, 경제 재도약

신산업·미래산업 육성

첨단산업 인재를 확보하겠습니다. 139
세계 시장경쟁력을 갖춘 녹색해운으로 앞서가겠습니다. 140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물류 선도국가를 앞당기겠습니다. 141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2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우주시대를 열겠습니다. 143
연구생활 지원금 등을 통해 젊은 과학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144
기초와 도전적 연구에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145
난치병을 정복하는 미래의 먹거리, 바이오를 육성하겠습니다. 146
게임 체인저,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기틀을 강화하겠습니다. 147
원자력 안전, 국민의 삶과 함께하겠습니다. 148
K-콘텐츠 집중 지원을 통해 K-콘텐츠의 세계적 재도약에 앞장서겠습니다. 149
체험형·체류형 관광 지원으로 대한민국 관광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150

투자활성화로 수출강국 도약

반도체산업에 혁신적 지원으로 세계 1등, 수출 강국을 이끌겠습니다. 153
투자특(特)국! 투자하기 좋은 나라,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54
에너지 강국! 에너지 수급은 합리적으로, 에너지 복지는 두텁게 하겠습니다. 155
통상대국! 수출 G5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156

산업육성 위한 대못규제 개혁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59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로 경제현장과 가정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160
국회부터 규제개혁에 앞장서 국회 입법의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161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162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63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규제개혁을 확대하겠습니다. 164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65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Contents

지역 함께 성장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을 통해 거점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69
전국 GTX 건설로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170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대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171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확충하여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172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73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을 수정하여 격차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74
여객선 항로단절 ZERO를 이뤄내겠습니다. 175
사회복지시설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강화하겠습니다. 176

의료 격차 해소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179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180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81

문화·디지털 격차 해소

문화로 지역 격차를 해소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183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5

지역경제 활력기반 구축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규제완화, 쌀값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187
농가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188
어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9
세컨드 홈 활성화로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부활하겠습니다. 190
대학생 아침밥, 서민 국산 농수산식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91
친환경 축산, 탄소중립 산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92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든든한 수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193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육성으로 지역의 혁신과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194
인구절벽시대, 이주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배달합니다. 195
기업의 지방 이전 혜택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96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Contents

시민안전 건강지킴

민생·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응 강화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201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3
전세사기를 야기한 임대차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 204
가짜뉴스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205
불법·유해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6
범죄로 상처입은 피해자를 위해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207
헌법 제27조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진술보장권'을 확대하겠습니다. 209

촘촘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11
전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212
응급한 국민 생명, 국가가 책임집니다. 213
국민의 건강을 세밀하게 지원하고 비용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214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215
마약, 도박, 알코올 등 급증하는 중독문제에 예방 및 치료회복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16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7
ICT 기반, 만성질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8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를 육성하여 글로벌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219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환자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220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을 드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221

스마트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23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24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226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227
재난안전·소방산업 육성으로 국민 안전을 높이고 국가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228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Contents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겠습니다. 233
북한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주도하겠습니다. 235
해외여행자 및 체류자 안전보호 책임지겠습니다. 236
지구촌 재외동포와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7

자유평화 한반도

북한이탈주민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239
이산 및 납북자 가족 고통의 목소리, 국가가 위로하고 응답하겠습니다. 241
헌법가치에 충실하게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242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4

기후미래 녹색생활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합니다. 249
기후위기로 인한 무더위와 한파로부터 지켜드리겠습니다. 250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51

저탄소 전환 촉진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 25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합니다. 254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지원

기후산업을 키워 지역경제도 일으킵니다. 257
녹색금융으로 기후산업이 일어나고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258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탄소리워드를 확대하여 동료시민과 함께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합니다. 261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화재예방 충전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26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를 일으킵니다. 264
전생애 기후 환경 교육으로 기후 위기 제대로 알고 대응하겠습니다. 265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Contents

모두 함께 동행

아동·청소년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269
미래의 희망 어린이에게 안전한 등굣길을 배달합니다. 270
발달지연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71

청년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273
청년 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74
미래세대의 문화 생활을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75
사용자(게이머·팬) 친화적 게임 및 e-스포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76
청년들의 세계를 향한 도전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77
청년들에 대한 '인턴 희망고문'을 근절하겠습니다. 278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79
허위 채용 광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80
결혼에 부담이 되는 혼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81
청년·신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82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예비 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283

여성

생애주기별 여성의 3대 질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85
미혼여성에게도 난자 동결시술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86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9
한부모가정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자녀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290

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93
함께 누리는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294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295
장애인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96

군인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299
생활밀착형 복지지원 확대로 군 장병과 군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00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겠습니다. 301
참전명예수당의 실효성을 높여 영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302

제복공무원

제복 공무원의 긍지와 명예를 배달합니다. 305

사회적 약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찾겠습니다. 309
폭력·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310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311

1인가구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13

반려동물

반려동물 정책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315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시면, 공약발표 현장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 일·가족 모두행복 1차
- 일·가족 모두행복 2차
-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 구도심 함께 성장
- 지역 모두 튼튼
- 어르신 든든 내일 1차
- 청년 모두 행복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 중소기업 새로 희망
- 청년 모두 행복 2호
-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 함께 누리는 문화
- 기후 미래 택배 1호
- 기후 미래 택배 2호

정책주문 ·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 해묵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실시하겠습니다.
- 돈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 띵동! 주문합니다!

해묵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01

현재는..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항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

– 그러나 지금은 각종 불법·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회를 빌어 국회의원 방탄의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정당한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국민들의 심각한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지경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발언상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공익을 도모케 하는 것이 취지**

– 지금은 팩트체크도 하지않고 '아니면말고'식의 가짜뉴스를 유발하고, 심지어 고의로 막말과 거짓말을 유포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방편으로 전락하여,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제공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을 하는 자리로서, 국회의원들이 정책이 아닌 정쟁에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공감**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 국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제44조를 실질적으로 사문화 추진

– 당선된 국회의원 또한, 선거운동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약속 이행 및 강제절차, 윤리위 규정 강제적용 검토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

–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내 발언이라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현저히 벗어난 비방이나 막말, 가짜뉴스 양산, 국민혐오 유발 등이 명백한 경우, 국회윤리위 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추진

▶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권 내려놓기' 원칙 적용**

– 당선된 국회의원도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약속 이행 및 강제절차 집행, 윤리위 규정의 강제적 적용

▶ **국회의원의 특권 중 가장 큰 특권인 의원정수 자율지정 폐지 및 50명 감축**

– 국회의원 수 축소의 당위성과 공론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이슈 토론회 즉각 추진

▶ **제22대 국회 원구성 직후, 관련 헌법 및 국회법 개정 즉시 추진**

– '(가칭) 정치·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최우선 현안으로 통과 추진

▶ **「헌법」,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실시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국회의원이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지급**

–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이후에도 수당, 입법 및 특별활동비 등이 꾸준히 지급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

▶ **현재 국회법(제32조 제2항)상으로는,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토록 규정**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하여 세비 전액 반납**

– 22대 국회가 원구성 완료 후, 관련 법 개정안 처리 추진

▶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 불참한 경우, 세비 감액 추진**

– 월별 전체 세비 총액대비 결석일수 만큼 삭감

– 병가 및 청가의 경우 규칙을 만들고 의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 **국회의원 보수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

▶ **「국회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돈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현행법상 정치인이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은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악용**

▶ **정당 경선에서 돈 안 드는 선거의 실현은 정당개혁과 깨끗한 정치 실현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 비용에 있어 형식적 회계 보고에 불과**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받는 관행 근절**

– 22대 국회 원구성 완료 후, 곧바로 관련 법 개정안 처리 추진
– △출판기념회 횟수 제한 △출판기념회 수익금 신고 △구매한도 제한 △책 정가 구입 △의정보고회 활성화 등

▶ **쩐(錢)당대회 청산**

– 당 대표 경선 등을 전담하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 경선비용제한액 설정
– 경선비용 지출내역 공개
– 범죄 혐의시 고발 및 처벌 규정 신설

▶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0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일·가족 모두 행복

- 일·가정 양립 혁신
- 촘촘한 돌봄·교육 환경 구축
- 저출생 문제 해결, 국가책임 강화
- 돌봄 격차 해소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일·가정 양립 혁신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01

현재는..

▶ **저출생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동시에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문제**
또한,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

▶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
–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 등이 일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아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 및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 → 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5일)**
–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02

현재는..

-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여건 조성이 필요**
  - 특히, 최근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세대 중심으로 유연한 근무에 대한 관심 확대

-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당시 급증했던 유연근무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과 선호는 지속될 전망**

- **사업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확산되도록 정책적 뒷받침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
  -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육아기의 다양한 근무 형태 지원
  -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촘촘한 돌봄·교육 환경 구축

-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로 대한민국 가장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보육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늘봄학교 전면 확대로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채우겠습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영·유아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교권과 학생인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겠습니다.



🔔 띵동! 주문합니다!

01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로 대한민국 가장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함
-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피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여야 함
- 현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 출산·입양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 → 23세로 상향
-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공제 혜택 확대
  -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 3백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 → 7백만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
  * 세 자녀일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비교 : (종전) 65만원 → (개선) 90만원
- 출산·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은 30/50/70만원→50/70/100만원으로 상향
- 「소득세법」 개정

보육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02

현재는..

▶ **집으로 찾아가는 정부인증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보육 수요 충족에는 역부족**

▶ **기업 특성상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보다 다른 방식의 돌봄 지원을 하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

- (정부 기본지원)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지급
- (정부 추가지원) 소득·자녀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바우처 지원
-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지출로 전환시 추가 지원 제공

–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 절감 도모

▶ **기업의 임직원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유도**

– 기업의 임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 확대 적용

– 직장어린이집 미충원 자리를 타기업과 지역에 적극 개방 유도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 **산업단지 등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충 및 추가 수당 지급

늘봄학교 전면 확대로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채우겠습니다

03

현재는..

- **초등단계에서 교육·돌봄은 학부모의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있어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 '학원 뺑뺑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

- **현재까지 초등 돌봄교실은 신청자격 제한, 제한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한 학부모의 교육·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
  – 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은 맞벌이 가정의 큰 애로로 작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늘봄학교 전면 확대**
  –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
  –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

-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 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 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제공

- **늘봄학교 단계적 전면 무상**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실시로 초등학교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추진
  – (2025년) 초1, 취약계층 전학년 → (2026년) 초2 ~ 3 → (2027년) 초4 ~ 6

-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
  →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 급식 문제 해결

-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영·유아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0세 ~ 5세 아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교육·보육 서비스로 인한 비효율 및 격차를 해소해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할 필요**

-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 단위 관리 일원화 법적 근거 확보**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우선 추진**
  –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 지속 추진

-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관리체제 일원화 추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통합 교육과정 개발, 수준 높은 교사 확보를 위한 연수 강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시스템을 통합하여 학부모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05

현재는..

▶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AI 미래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교육혁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새학기 도약 바우처' 지급 단계적 추진**
– 초1부터 고3까지 매학기 초(3월, 9월) 50만원씩 지급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등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초·중·고 성취 수준에 맞춘 학습을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어려운 학생 대상으로 통합적 지원 강화

▶ **디지털 교육 혁신**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초·중·고 학생들의 SW·AI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새싹캠프 확대

▶ **EB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사교육 경감 추진**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울런' 등 우수사례 확산 보급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교원·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 · 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06

현재는..

▶ **학교 내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 근절대책 필요**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최우선적 보호 및 학교폭력 시 불이익 인식 확립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조치 지속 추진 필요**

▶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적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낙인효과를 우려해 방치하는 경향**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
–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한 번 신청으로 △사안 처리 △상담·치료 △법률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제공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여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 및 전문적 지원 강화

▶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 조치**
–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조치기록 삭제시 피해학생 동의 필요
– 2026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

▶ **학생 마음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
– 학교 내 마음건강 진단 및 전담병원 연계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교권과 학생인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겠습니다

07

현재는..

- **일선 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실추된 교권 회복 및 보호 조치 필요성 확대**
-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교육기반 마련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추진**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추진
-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 교권 보호 5법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개 및 보완 추진

〈교권 보호 5법 주요 내용〉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및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저출생 문제 해결, 국가책임 강화

-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위기·세대갈등·성별갈등 해소하겠습니다.
- 저출생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위기·세대갈등·성별갈등 해소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저출생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 저해, 세대갈등 조장 등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 2023년 합계출산률 0.72명을 기록하며 ‘한국 소멸’까지 언급되는 상황**

– 저출생 문제는 보건복지, 가족,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돼 각 부처의 개별 정책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급의 총괄 조직 필요

▶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 관련 논의 및 논란 지속**

–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이 ‘여성’ 또는 ‘남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여성’가족부 명칭으로 인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본래의 목표와는 괴리되는 상황 발생

– 정책 및 사업 중심이 아닌 수혜대상 중심의 조직 특성으로 인해 타부처와의 사업 중복 다수 발생 및 여성가족부 포괄 업무가 타부처 사각지대 형성 야기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로 인구위기 관리 및 국가발전·갈등완화 도모**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저출생 정책을 연계하여 총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과 세대갈등·성별갈등 완화에 기여

저출생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저출생 관련 정부지원은 영유아기에 집중**

– 생애주기 필요에 맞추어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현금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 위해 2025년까지 '통합 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등에 원하는 곳에 지출하고, 0 ~ 1세 부모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하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

▶ **재설계 및 통합관리 목표**

–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 세금을 소중하게 활용

–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할 시기와 방식에 선택권 부여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돌봄 격차 해소

-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소아응급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주도 공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도서관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하려고 해도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직장 동료들의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로 쉽게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 상향
-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 적극 지원
- 육아 동행근무제 위한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 신설
-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 인상 및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인상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

- **일·가정 양립제도의 사각지대와 이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2025년 도입**
  - 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소아응급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응급실에서 소아응급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환자·보호자 불편 증가**

  * 시간·연령·증상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가능 기관은 약 20%에 불과(2023년 3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확대**
  - 의료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전국 확대
  - 소아응급 인프라 유지 및 중증 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및 응급관리료 인상 등 지원 확대

- **소아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
  -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의료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소아 상담센터 지정**
  - 소아응급상황에 의료인이 증상 상담, 처치방법 안내,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를 위하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상담 기능 강화 또는 소아 상담센터 별도 지정 추진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주도 공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가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력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양질의 지역 교육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

  ※ 교육발전특구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와 연계 추진**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확대**

  – 기업·지방자치단체·대학이 주도하는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양성
  –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확대 및 시설 등 개선

- **고교단계 외국 유학생 유치하여 지역인재로 활용**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도서관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05

현재는..

-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교육·돌봄 격차와 문화·체육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 확대 필요

- 학교부지 내 학교복합시설을 확충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복지 시설 구축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지역 수요에 맞춰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대폭 확대**

  – 신도시 조성 시 학교복합시설 병행 추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 간 협약을 통해 학생의 교육활동에 활용되는 시설 우선적으로 확충**

  – 늘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 **초·중·고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학교 부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시설 설치**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0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어르신 든든 내일

- 간병비 부담 경감, 국가책임 강화
-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 어르신 건강한 생활 지원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간병비 부담 경감, 국가책임 강화

• 간병비 걱정,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간병비 걱정,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고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간병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지출, 1일 평균 9만원 절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을 400만명까지 확대

* 현재 : 112,197원(입원료 + 간병비) → 개선 : 입원료만 부담(22,340원), 89,857원 경감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2024년 7월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 간병인 등록 및 자격 관리제(2025년) 및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추진

–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 요양병원 간병 관리 위원회 설치 의무 등 추진

▶ **퇴원 환자에게 의료·간호·돌봄 서비스 제공**

▶ **간병 현장에 복지기술을 적용, 간병업무 경감 및 관련 산업 육성**

– 간병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 품목 및 연 한도액 확대 검토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 어르신의 주거와 소득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혼자 사는 어르신께 안전 로봇을 배달합니다.

어르신의 주거와 소득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어르신의 주거와 소득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요건 및 혜택을 지속 개선중**

▶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된 주택연금의 상환 의무 발생**

– 질병치료, 심신 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소 등에 입원하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만 실거주 예외를 인정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 주택연금 수령자가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되도록 허용하여 실버타운 비용 마련을 위한 현금흐름 확보 지원

– 주택연금 가입기준(주택가액 한도)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여 실버타운 연계 효과 제고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4년 하반기 1천만명 돌파 예상, 초고령사회 진입 등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버타운 수요가 증가**

– 기존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승인 및 건축 절차 간소화 및 각종 규제 문제 재정비

* (예) 일본, 2011년 「고령자의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주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주택 시장 활성화

▶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확대 및 서비스 연계 강화**

–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 대폭 확대

– 다양한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및 고령자복지주택 내 다양한 서비스 지원 시설 도입

혼자 사는 어르신께 안전 로봇을 배달합니다

03

현재는..

▶ **독거노인 등 1인가구 저소득층의 경우 고독사 위험 노출 등 안정적인 케어가 필요한 실정이나 돌봄 제공의 한계 발생**

▶ **화재 발생 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망 위험 노출이 큰 상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AI 기반 안전로봇, 음성형 신고 및 동작 감지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여 혼자 사는 어르신 실시간 안전 관리 체제 구축**

▶ **몸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한 '불빛 화재경보기' 등 맞춤형 화재 예방 및 소방기기 무상 보급 확대 추진**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어르신 건강한 생활 지원

-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 치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파크골프 등 어르신 친화형 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격한 고령화 진행 속도를 고려한 어르신 건강 및 의료·요양 돌봄 대책 마련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절감분은 부식비에 사용토록 유연한 집행체계 구축
– 이용시설 방문이 곤란한 취약 어르신의 경우 배달 식사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연계)

▶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청소·취사 등) 확대**

– 중점돌봄군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 확대
– 소득기준 제한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대상자 확대
–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노노케어 확대

▶ **노인 일자리 확대**

–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지속유지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인력 공급이 부족한 돌봄 문제 해소 기여

▶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확대**

– 지역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 지원 강화

▶ **살던 곳에서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

– 방문의료 및 사례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 확대
– 퇴원환자, 중증질환자에게 치료 계획 수립, 방문진료·간호 등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적용
–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

▶ **어르신의 건강생활 지원**

–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및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추진
–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 개발·보급(경로당, 복지관, 보건소, 주야간센터 등)

▶ **마음카페(세대공감 커뮤니티 조성 확대)**

–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세대공감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은퇴세대 어르신과 어린이·청소년 등 세대공감 소통장소 마련

치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2

현재는..

▶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에도 관련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

▶ **고령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운영(~2025년 12월) 후 전국 확대 추진**

▶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

▶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전담인력 확대 및 인식개선**

– 후견인 후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풀 DB 구축 및 인센티브 강화

▶ **법률구조공단과 치매관리센터 유기적 협조 확대**

▶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하는 노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파크골프 등 어르신 친화형 체육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 구조 변화 시대가 도래
- 시니어 세대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 생활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
- 지역별 인구 구조에 따른 맞춤형 체육시설 확대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파크골프 등 지역·수요 맞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전국 확대**
  - 파크골프, 수영장,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테니스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메디컬룸, 건강 측정실 등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
  - 공원, 폐교, 그린벨트, 유수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설치 확대
- **시니어 친화형 프로그램 지원 및 대회 개최**
  -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탁구, 수영 등 시니어가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및 '시니어 생활체육대회' 개최
- **시니어 건강 및 체력 관리 지원**
  - 시니어 대상 건강진단–운동처방–운동참여 연계를 통한 개인 맞춤형 체력관리 지원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0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민생 활력, 새로 희망

-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 근로환경 격차 해소
-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습니다.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만들겠습니다.
-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을 성실 상환할수록 금융은 더욱 큰 힘이 됩니다.
- 가상자산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유지**

– 지난 20여년간 1인당 GDP 2.7배 상승을 고려하여 보호한도 상향 필요

▶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호한도 조정 필요성 지속 제기**

* (해외사례) 미국 25만불, 일본 1천만엔, 영국 8.5만파운드 등
* 한국금융학회 설문조사(2022년) 결과, 금융소비자 중 46.0%가 1억원 ~ 2억원 미만을 적정 보호한도로 선택했으며, 33.2%가 8천만원 ~ 1억원 미만을 선택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얻은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전면 확대·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

–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은 세 부담과 이중과세 논란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이 커지자 문 정부는 공제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대주주에게 적용되던 높은 과세비율(지방소득세 포함, 22%/27.5%)을 2023년부터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법제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 **「소득세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로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서민과 농어민에 대한 우대형은 비과세 한도 4백만원
  * 서민형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농어민형 :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 납입 한도 : 연 2천만원, 총 1억원 납입
– 의무가입기간 : 3년
– 만기자금 연금계좌 납입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가 가능(최대 3백만원)
– 계좌개설 및 만기연장 시점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가입 불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납입한도 상향 :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2백만원 → 5백만원
(서민형 : 4백만원 → 1천만원)
–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
  *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과거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큰 인기를 얻음**

–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
– 가입대상은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만기 10년의 적립형 저축상품
–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 이자가 조금 높은 편(2013년 은행예금 금리 2%대, 재형저축 금리 4% 전후)

▶ **재정 부담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각자 목표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지원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목돈 마련 지원**

–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가입 문턱(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은 낮추고,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로 상품 선택의 폭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만들겠습니다

05

현재는..

▶ **기금 고갈 현실화 우려 등 장기적 재정불안정에 노출된 국민연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추진**

–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등 구조개혁 추진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06

현재는..

- 현재 서민금융대출 서비스는 단순히 서민금융상품 안내만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상품 중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기 어렵고 사용 방법도 복잡하고 불편

- 고용, 복지, 채무조정 등을 연계하는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의 사각지대 존재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 선도**
  - 민간의 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조회부터 상품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지원
  -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지원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복합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의 사각지대 해소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7

현재는..

-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대출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요구 지속 제기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 대출목표 수준을 '말기잔액' →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평잔 30% 이상 목표 부여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목표에 포함하여 관리

- **연체율 관리와 중 ·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은행권의 중 · 저신용자 대출 비중 단계적 확대**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8

현재는..

▶ **다양한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

▶ **대출 이동의 활성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 확대 개선**

– 서비스 대상 대출 범위 지속 확대 및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등 추진

▶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산정 기준 비교 공시

대출을 성실 상환할수록 금융은 더욱 큰 힘이 됩니다

09

현재는..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한 채무조정자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긴급한 자금 필요 시 생계자금 대출 지원 중**

▶ **정책서민금융 대출자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할 경우 성실 상환에 따른 보증료율 인하 및 금리 인하 등 지원 중**

–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성실 상환자가 긴급한 자금 필요시 추가 대출을 허용할 필요

* 2022년 2월부터 서민의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신규 대출자에게 정책서민 금융상품 대출한도를 증액하였으며 대출한도 증액을 금년까지 연장하기로 기발표 (2024년 1월 4일)

* 근로자햇살론 1천5백만원 → 2천만원, 햇살론뱅크 2천만원 → 2천5백만원, 햇살론15 1천4백만원 → 2천만원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을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 지원**

– 정책서민금융 대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대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 제고
–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 협의 추진

가상자산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10

현재는..

▶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질없는 정착을 뒷받침하고, 2단계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보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규율체계는 마련되었으나,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발행 허용, 통합시세 · 통합공시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의 가상자산 규율 체계 완비가 중요

▶ **조각 투자(음원, 미술품 등)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자산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 등의 제도 정비도 시급**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 완료 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세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제규정 정비 완료 후로 시행 연기 검토

▶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제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2단계 입법* 추진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 등 세분화된 사업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입증책임 문제 등

띵동! 주문합니다!

▶ **가상자산 전담위원회(Commission)를 설치하여 가상자산에 맞춤화된 전문성 있는 제도 지원 및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

– 투자자 보호, 공시 및 평가 등의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하는 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

▶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으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

– 거래소 간 정보 비대칭 현상 완화 및 거래소의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거래소의 책임성 강화

–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대상,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관리

▶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허용

▶ **토큰증권(STO) 입법의 연내 마무리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수익률 제고 기대 가능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11

현재는..

- 최근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급증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
-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이고 악랄한 불법대부계약 기승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근거 마련
-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
-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 확대 개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근로환경 격차 해소

- 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에게 빠짐없이 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안전한 중소기업, 함께 만들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01 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에게 빠짐없이 돌려드립니다

현재는..

-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유급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쉬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해소 및 이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
- **경사노위에서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
- **영세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병행 추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노동시장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연금 등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증대**
  -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률 격차가 크며,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시행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 마련 필요**
- **기업의 정년 후 재고용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 확대 필요**
  - 특히, 퇴직 후 연금 수급 연령 상향(62세 → 63세)에 따른 소득 공백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수준(2년)으로는 한계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60세+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로드맵 마련**
- **중소·중견기업의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연장 등) 도입 활성화**
-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제공 등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
-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도입**
- **「고령자고용촉진법」, 「노동위원회법」 개정**

안전한 중소기업, 함께 만들겠습니다

04

현재는..

▶ **중소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나, 중소기업 여건상 전문인력의 확보, 안전시설 투자 등에 한계**

– 이에 따라 처벌보다는 교육, 기술지원 등 재해 예방에 초점을 두어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징벌성 규제가 아닌,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 마련**

– 조속한 관련 법령 정비 및 현장 산업안전감독 체계 구축

▶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안전보건체계 마련 지원**

– 50인 미만 기업 전체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지원
–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 유예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

-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겠습니다.
- 공정거래 통합분쟁조정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제조물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건설현장 부당이득, 국민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로 화물차주 처우와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국민과 택배 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프랜차이즈 맞춤형 납품대금 결제카드로 가맹본사와의 대금결제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 모바일 기프티콘 더 편하게 사용하세요.

띵동! 주문합니다!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K-POP, 트로트 등 대중음악 공연과 대규모 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빈번**

▶ **암표 거래가 점차 기업화·조직화되고, 암표와 관련된 사기 등 2차 범죄 발생**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암표 거래를 공익을 해치는 중한 범죄로 처벌**

- 공연, 팬미팅, 운동경기, e스포츠 등 모든 암표 거래 근절
-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처벌

▶ **암표 단속 및 신고 체계 정비**

- 티켓 판매자의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의무화
- 민관 협력 암표 신고 사이트 강화
- 개별 운영 중인 신고 사이트 통합으로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

▶ **AI, 블록체인, NFT 기반 암표방지 시스템 도입·구축**

- AI, 블록체인 등 기술을 도입한 매크로 차단, 입장권 거래 사전 인식 기술 개발 등 선제적·기술적 시스템 도입·구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02 공정거래 통합분쟁조정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개별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자신이 입은 사적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고, 당사자간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과도한 개입이 투입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음

▶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신속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위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제도 통합·일원화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등

▶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 신설 및 보강**

– 간이 조정절차 신설, 소회의 제도 확대 등 절차 간소화

– 분쟁당사자 간 이견이 큰 경우 활용가능한 감정·자문제도 운용의 법적근거 마련

03 제조물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현재는..

▶ **자동차 급발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등 제조물 결함의심 사고 반복적으로 발생**

▶ **기술발달에 따라 정보·지식 등이 제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행법은 간접사실의 입증만으로 결함을 입증한 것으로 일부 완화**

– 그러나 정보 비대칭,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로 여전히 소비자의 피해입증은 어려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입증책임 전환 관련, 제조물의 결함 추정 요건 완화 추진**

▶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 같은 제조물 모델에서 유사·동일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제조사가 성능시험대행자에 사고 관련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 **전자장비, 기계설비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배상 가능하도록 AI, 소프트웨어 등도 제조물 범위에 포함**

건설현장 부당이득, 국민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04

현재는..

- 건설분야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과 감리–건설사 간 유착관계 형성 등이 부실시공 촉발로 이어져 국민 피해 우려
- 건설현장에서는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 만연
-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온갖 횡포를 일삼는 사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그간 윤석열 정부는 불법행위 엄정대응 기조로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에 따른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 건설노조의 부당 금품요구 및 수수, 채용 강요와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 마련
- 건설현장에 만연한 사측의 불법하도급, 감리위반, 품질·안전규정 위반 및 노측의 공사방해, 금품수수, 채용강요, 폭력행사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개정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로 화물차주 처우와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05

현재는..

-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국가 물류 시스템 마비는 국가 산업 전반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천문학적 국민경제 피해 야기
-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기존 운임제도의 갈등 심화, 지입제·다단계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 부각
- 윤석열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열악한 화물차주 처우개선과 국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나 야당 반대 지속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단순히 운임만 강제하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운임제도인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 화주–운수사 간 운임은 강제성 없이 표준화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하여 차주 소득 보호(차주의 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도달 시 적용 제외)
- **화물운송산업 개선을 통한 열악한 화물차주 처우 개선**
  - 일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지입차량 차주 소유권보호,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근절 및 복지사업 확대,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보급
-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 운행기록장치(DTG) 정기 제출 의무화,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 처벌 강화 및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 처벌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국민과 택배 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

06

현재는..

-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비대면 주문이 늘면서 택배 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중요 산업으로 발전
- 일부 강성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파업 강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배송 거부, 특정 정당 당원가입 종용, 본사 점거, 택배 대리점 빼앗기, 대리점주 및 비노조 종사자 폭행 등 불법·폭력 행위가 도를 넘어 국민 피해 가중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조직화된 택배노조의 불법·폭력집회로 인해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배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노조 등 택배 서비스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택배 서비스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법령 위반, 폭력행위 등 운송위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프랜차이즈 맞춤형 납품대금 결제카드로 가맹본사와의 대금결제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07

현재는..

- 2016년 일부업종의 가맹사업표준계약서 상 현금결제 강요 방지조항 포함
  - 현재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치킨, 커피, 기타외식업 등) 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원·부재료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하도록 강요 불가
- 몇몇 브랜드사는 여전히 가맹점주에게 현금결제만 요구하거나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결제방식 제한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가맹점이 본부에 결제해야 하는 납품대금의 카드결제 의무화
  -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납품대금 결제방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 표준가맹계약서상 현금결제 강요 방지조항을 전 가맹업종 가맹사업표준계약서로 확대
- 프랜차이즈 납품대금 결제 맞춤형 카드 발급
  - 가맹본부의 결제수수료, 가맹점주 대상 카드결제 프로모션 등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사장님 맞춤형 카드' 도입 추진
- 연 1회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전 가맹점의 카드결제 실적 및 결제금액 대비 결제수단별 비중 항목 추가 공시 의무

모바일 기프티콘 더 편하게 사용하세요

08

현재는..

▶ **2018년 2조원 규모의 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 시장은 2022년 7.3조원으로 성장, 지난해 상반기까지 5.2조원이 거래되며 가파른 성장세**

▶ **2023년 국정감사 당시 불공정한 환불기준과 수수료율, 권면금액 미표기 및 사용 후 잔액환불 불가, 과도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등을 지적**

– 이후 일부 업체는 지적된 내용을 적극 시정하면서 시장개선을 이끌었으나, 아직 주요 상품권발행 및 거래플랫폼, 입점 브랜드사의 자발적 개선이 부족한 상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환불(소비자)·결제/사용(가맹점)과 같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

–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을 구매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로 상향
– 결제/사용(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사용처 가맹점과의 수수료 부담비율 협의 의무 검토
– 모바일상품권 선물하기 수신자도 교환·환불요청 할 수 있도록 약관 마련

▶ **물품교환형 모바일상품권 잔액환불 정책 확대**

– 본사 직접영업 브랜드의 잔액환불 자율도입 확대 지원
– 잔액환불·상품교환 편의성 확대를 위한 가맹점–가맹본부와의 자율협약 지원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0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소상공인·중소벤처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 중소·벤처기업 지속성장 지원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 저금리, 장기 자금 공급 등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안정을 뒷받침합니다.
-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합니다.
- 소공인의 제조환경 개선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쉽게 정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 새출발기금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의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장기 자금 공급 등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안정을 뒷받침합니다 01

현재는..

- **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은 가중되는 실정**
- **소진공 운전자금 및 신보 대환보증은 상환기간이 단기(2년 거치 3년 상환)임에 따라, 2년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게 되어 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
- **전통시장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전통시장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외의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지원 부재**
-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5만 명에 불과하며,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근거는 마련(2024년 7월 시행)되었으나, 아직은 시행전**
  – 또한, 50세 이상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배려는 없는 상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 상향하여 총 28조원 공급**
-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운전자금과 대환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을 2배 연장**
-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지원**
  – 시군구 지정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지정확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 발행
  –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신설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2025년) 및 노령소상공인 구직급여 수급기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개정**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02

현재는..

-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환경 개선을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이용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은 여전히 존재
- 온라인 중심으로의 소비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소상공인들이 떠나가면서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 · 골목상권도 다수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을 지속 확대**
  - 전통시장·상점가 인근 공용주차장 건립지원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대
  - 경영혁신지원 대상 확대 및 상품권 환급 등 판매촉진 행사를 매년 추진
- **오랜 역사·문화를 가진 100년 시장의 상징성을 살려 '100년 전통시장'으로 브랜드화**
  - 시장과 지역이 보유한 관광지, 특산물, 유명 먹거리 등을 K-푸드, K-컬쳐 등과 연계하여 테마 발굴 및 확산 방안 마련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지속가능한 상권조성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 상권 문제해결 및 활성화 전략 도출을 위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지역상권의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상권관리·운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추진
- **상권주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테마공간 조성, 상품 개발 등 종합적인 상권 활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상권활성화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03

현재는..

- 고금리, 고물가와 전세계적인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환경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상공인들이 경제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물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유통물류체계 구축
- **소상공인 협업체 인큐베이팅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기능 지속확대 및 온라인 판로 진출 등 지원**
- **지역별로 인지도가 높고, 품질,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 지역대표기업으로 육성**
- **적합업종 등 대·중소·소상공인간 갈등을 겪는 업종에 대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상생방안을 마련**
- **비대면·디지털화·온라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상점기술 보급 및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합니다

04

현재는..

-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성이 있음에도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경제를 이끌고 갈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
-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꾸준히 커나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 미흡**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로컬크리에이터를 본격 육성하여 지역상권 선도**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협업과제 확대
  -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지원하여 상권을 형성하는 '골목형 로컬브랜드' 확대
  - 지역 대학 등 전문기관에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전공, 학과 등 교육과정을 신설
- **준비된 강한 소상공인 육성**
  - 신산업창업사관학교 입교 소상공인을 확대하여, 창업교육·상담·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제공
  -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가진 역량있는 소상공인과 창의성을 갖춘 창작자·스타트업 등 혁신주체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 지원
- **소상공인 전용 메이커 스페이스 신규 구성**
  - 소상공인 스스로 인테리어·디자인, 메뉴개발, 체험창업, 온라인판매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용 메이커공간 구축

소공인의 제조환경 개선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05

현재는..

-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즉 소공인들이 50만개 업체 이상 존재하나 대부분 영세하여 수작업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작업 효율이 떨어짐**

  * (도시형소공인) 51.3만개사(2020년) ⇒ 55.1만개사(2021년)로 3.8만개사 증가
  ** (집적지) 집적지내 26.2만개사 소재 (전체 소공인의 47.5%, 2021년 기준)

- **50만 소공인들이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끌어 갈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 글로벌화, 판로개척 등을 지속 뒷받침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클린제조환경조성 확대**
  -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장비교체 등을 지원
- **내수 및 수출 관련 판로개척지원 강화**
  - 성장 잠재력를 보유한 우수 소공인의 온·오프라인 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 판로종합지원
- **소공인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확대**
  - 소공인·집적지 증가에 따른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지원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 제조공정에 기초 수준의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화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확대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쉽게 정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06

현재는..

- **현행 전기요금 부과 체계는 사용 목적, 전력량, 전압 및 사용방식 등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
  - 용도에 따라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고, 용도 내에서 계약전력량에 따라 '갑, 을', 전압에 따라 '고압, 저압', 계절과 시간대 등 사용패턴에 따라 전기요금 별도 적용

-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갑) 요금을 사용하며, 산업용·주택용 요금도 적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명확하게 정비**

- **정비 과정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체계 반영 추진**

새출발기금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07

현재는..

-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 요구가 크게 증가**

- **'채무조정 성립사실'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재되어 신용평가 불이익 등 발생**

  * 현재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2년간 성실상환하는 경우 채무조정정보를 삭제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현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대**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차주의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재 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08

현재는..

▶ 음식점 업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의 각 테이블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주문·결제하는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등록 PG사를 포함한 다단계 PG 구조 등으로 인해 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

* Payment Gateway : 카드회사, 직·선불회사 등과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거래대행·자금정산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 업체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PG 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미등록 PG사 정비를 통해 다단계 형태의 PG 구조 단순화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중소·벤처기업 지속성장 지원

-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그린화를 지원합니다.
- R&D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수출 확대의 선봉이 됩니다.
-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토록 현장의 애로를 해결합니다.
- 창업이 강한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 손쉬운 창업! 누구나 부담없이 창업할 수 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 기업금융을 적극 공급하겠습니다.
- 벤처·스타트업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그린화를 지원합니다

01

현재는..

▶ **우리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지원**

– 그러나, 보급 확산 중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기초단계 중심으로 지원함에 따라, 스마트 공장의 활용률도 기대 이하

▶ **스마트공장의 질적향상과 함께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부각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비한 그린화 지원도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기업의 스마트·디지털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 대학, 대기업 등의 전문가로 '멘토단'을 구성 기업디지털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

▶ **지역별 테크노파크의 제조혁신센터를 디지털전환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단위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전환 활성화 추진**

▶ **ESG·탄소무역장벽 대비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수준 진단부터, 탄소중립 전략 수립,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설비 도입까지 패키지로 지원

–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MRV) 지원

R&D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2023년까지는 보조금 성격의 소위 '뿌려주기'식의 소액 위주 사업들이 중소기업 R&D의 대부분을 차지
- 성과를 낼 수 있도록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혁신기관들과의 협력도 확대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전체 중소기업 R&D 규모는 2024년 1.4조원에서 2027년 2조원 이상으로 증액**
- **민간 선별 능력을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확대하면서 사업화지원도 연계**
  -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과 기술기반 혁신기업이 벤처투자사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R&D 운영
  - 제품개발 후 양산을 위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신속한 성과창출을 지원
-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혁신 선도기술을 집중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제조, 양자
- **혁신기업의 세계 진출·협력 기술개발 지원 강화**
  - 창업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전용 기술개발 추진
  - 중소기업의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조성하여 기술수준 향상
- **지역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지방중기청이 밀착형으로 발굴하는 기술개발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수출 확대의 선봉이 됩니다

03

현재는..

- 2023년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달러로서 전년 대비 2.3% 감소
- 특히, 2023년 수출지원기업 2,644개사의 전년동기 대비(2022년 11월) 수출 증가율은 4.5%로 전체 수출중소기업 증가율 △2.3% 대비 6.8%p 우수하여 지속지원 필요
- 그러나 수출기업에 유리한 수출팩토링을 중소기업은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 수출 팩토링은 외상수출채권을 대출이 아닌 매입함에 따라 안정성과 유동성에 유리
  * 수은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수출 팩토링 지원 비중은 전체 지원실적의 1.28% 수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수출중소기업도 이용가능한 수출팩토링 서비스 개편 및 신규 도입 추진**
  - 수출입은행의 팩토링 지원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 추진
  - 무역보험공사, 중진공,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수출팩토링 도입 검토
- **우수 수출중소기업 대상 수출마케팅·금융·기술개발 등을 패키지로 지원**
  - ①수출바우처 ②수출금융·보증지원 ③금리·환율 우대 ④기술개발사업(R&D) 등
-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및 수출컨소시엄, 해외 전시회 참여 확대**
-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온라인 특화 마케팅 지원, 공동물류 지원 등 지속 추진**
- **해외의 인증 강화추세 등에 따른 대응력 향상을 위해 해외인증획득사업 확대**
- **공공기관이 보유한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토록 현장의 애로를 해결합니다

04

현재는..

-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는 지속되며,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

-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되었으나, 급상승된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
  - 특히,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의 경우 원가대비 전기료 비중(열처리 26.3%, 주조 14.7% 등)이 높아 전기료 부담이 높은 상황

- **2023년 9월 개편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에 대해 중소기업의 70%는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으나, 규모별로 상이한 상황**
  * 외국인 고용한도 부족에 대한 응답 : (51인 이상) 40%, (11인 ~ 30인) 27%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 **비수도권, 뿌리산업,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 고용한도에 대한 탄력성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창업이 강한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05

현재는..

- **그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등의 노력으로, 우리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
  * 벤처투자 : (2006년) 0.7조원 → (2021년 ~ 2022년 평균) 약 14.2조원 수준 (약 20배 증가)
    신설법인 : (2006년) 5만개 → (2021년 ~ 2022년 평균) 약 12만개 수준 (약 2.4배 수준)

-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 급격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스페이스K,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 신설 등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
  - 프랑스의 '스테이션F'와 같이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글로벌 창업허브로 조성
  -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

-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에 집중 투자**

-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 청년 창업가들이 유입·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등 10개 분야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2027년까지 1,000개 발굴하여 R&D·사업화·마케팅을 집중 지원**

- **한국의 유니콘(K-Unicorn)으로 성장 후보기업을 지속 발굴·지원**

손쉬운 창업! 누구나 부담없이 창업할 수 있습니다

06

현재는..

- 대학 재학, 군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이 부담없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다 확산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지역·대학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지정**
- **대학 및 군(軍)내 창업 친화적 환경 구축으로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 군(軍)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
- **아이디어 개발부터 사업화, 성장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지원
  -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기업(업력 3년 이내)의 시장진입 안착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도약기업(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스케일업 지원
- **수요자친화적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제공, 지원사업신청, 온라인 법인설립, 창업확인 등을 원스톱 지원**
- **대내외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 및 구조개선, 재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 기업금융을 적극 공급하겠습니다

07

현재는..

- 중소·중견기업은 고금리 부담,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증가로 경영애로 직면
-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인하 등 맞춤형 정책금융지원 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은 연구개발, 신산업 진출 등 신규자금 지원 요구도 큰 상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금융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 매출하락 등의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감면 지원,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지원 등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신산업 진출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 운용,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상품 개발 등
- **중견기업의 첨단기술·전략사업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사모사채(P-CBO) 발행 지원**
  - 유동화 증권의 발행 금리 인하 방안 마련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지원**
  - 성장단계별로 보증 지원을 세분화하고 보증 규모도 확대

벤처·스타트업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08

현재는..

▶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여전히 과도한 규제가 남아있어 펀드조성과 투자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생존율이 낮은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 구축

– 중견기업이 CVC설립을 통해 전략신산업에 진출하거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규모에 따라 분리규제

▶ **CVC 외부투자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금액 비중도 상향

–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CVC 해외투자 범위 해석요건 완화 적용 추진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0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미래산업 육성, 경제 재도약

- 신산업·미래산업 육성
- 투자활성화로 수출강국 도약
- 산업육성 위한 대못규제 개혁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신산업 • 미래산업 육성

- 첨단산업 인재를 확보하겠습니다.
- 세계 시장경쟁력을 갖춘 녹색해운으로 앞서 가겠습니다.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물류 선도국가를 앞당기겠습니다.
-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우주시대를 열겠습니다.
- 연구생활 지원금 등을 통해 젊은 과학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기초와 도전적 연구에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 난치병을 정복하는 미래의 먹거리, 바이오를 육성하겠습니다.
- 게임 체인저,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기틀을 강화하겠습니다.
- 원자력 안전, 국민의 삶과 함께하겠습니다.
- K-콘텐츠 집중 지원을 통해 K-콘텐츠의 세계적 재도약에 앞장서겠습니다.
- 체험형·체류형 관광 지원으로 대한민국 관광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첨단산업 인재를 확보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첨단산업 경쟁력은 인재 확보가 핵심이나, 인력부족은 심화될 전망**

▶ **첨단산업 인력부족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주요 경쟁국은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 총력전 전개 중**

– 미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엔지니어 30만명 및 숙련기술자 9만명 부족 전망, 반도체 인재양성에 132억불, 이공계 취업비자 등 확대 추진

– 대만은 전문인재에 골드카드 발급(제한없는 취·창업 등), 세제 혜택 제공 등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 산업계 공동으로 전용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종별 아카데미 확대

– 핵심기업 중심으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사내 대학(원) 확산

▶ **첨단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 및 첨단산업 고급인재 양성**

– 정원, 교원, 학사 자율화 등 규제 개선 지속 추진

–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확대

–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이공계 학업 전주기 장학지원체계 구축

▶ **2027년까지 글로벌 우수인재 1천명 유치**

– 해외인재유치센터를 통한 범정부 첨단인재 영입 시스템 구축

– 거주와 정착 패키지를 지원하는 슈퍼 패스 발급, 취업과 창업 전면 허용

세계 시장경쟁력을 갖춘 녹색해운으로 앞서 가겠습니다

02

현재는..

- **국제해운은 해운동맹의 재편, 홍해 후티 반군 사태로 인한 공급망 혼란, 파나마운하 통행량 제한 등으로 물류 불확실성 지속 증가**
  - 해운산업은 변동성이 극심하여 선사들은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 필요
- **UN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 목표 강화**
  - 2050년까지 50% 감축 → 탄소중립(Net-Zero)으로 목표 상향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해외 선사들과 동등한 경쟁을 위해 톤세제 일몰 연장**
-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확대**
- **친환경 등급 저등급(D, E) 선박의 운항을 위한 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에서 원활히 공급**
- **핵심에너지 운송에서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 원유, LNG, 철광석, 석탄 등 주요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을 70% 이상 유지
- **국적선 승선 해외 해기사도 국내 거주요건으로 인정하는 기술이민특례 제도 도입**
  - 한국선박에 5년 이상 장기 승선 외국인 해기사에 대해 한국 영토내 체류한 것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개방적 이민정책 도입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물류 선도국가를 앞당기겠습니다

03

현재는..

- **AI 등 첨단기술 발달과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자동화, 무인화 등 미래 기술을 융합한 소비자중심의 택배 서비스 확산**
-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입지규제, 타산업대비 낮은 수요자 서비스 수준으로 최종 서비스는 노동집약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유망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으면서, 로봇과 근로자가 협업하는 신물류 서비스 조기 상용화**
  - 주거지·사무실 로봇배송 서비스 기술실증 확대, 전용테스트베드 조성,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실증도시사업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공공 지원 확대
- **AI · 빅데이터 기반 초단시간 배송(1시간 이내) 구현을 위해 도심내 주문배송시설과 주거지·전통시장 인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물류시설 공급 확대**
  - 상업·주거·문화 공간이 융복합된 도시 첨단물류단지 확대, 노외주차장에 대한 규제 완화, 주유소 내 물류시설 설치 허용 등 입지규제 개선 병행 추진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신약 개발에서 허가 출시까지 막대한 기간 및 비용 소요**
- **우리나라는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연구역량을 보유했음에도, 국내기업 대다수 연 매출 저조**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 한국형 ARPA-H 확대 추진,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 확대 지속. 제약바이오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추진
  - 신약개발과 상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후기 2·3상과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 체계 개선
-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 신약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K-MELLODY)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신약개발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 실행
  - 신약 창출 효율화를 위한 공공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
-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 및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지원, 글로벌 의약 공급기지(CMO) 구축 등
-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원료 특화 연구소 및 생산기지 건립 지원 추진**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우주시대를 열겠습니다

05

현재는..

- **우주항공청 설립을 기점으로,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의 지평을 한차원 높게 도약시킬 적기**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2024년 1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우주항공청 출범**
  - 2024년 상반기, 혁신적 정부조직 형태로 개청하여 국내·외 민간인재 채용
- **지역의 삼각 클러스터 체제 구축**
  - (경남 위성 특화지구) 지역 소재 기업을 기반으로 위성 개발·제조·시험 인프라 집적 → 위성의 주력산업화
  -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항우연, 천문연, KAIST 등 국내 최고 기관에서 고급 인력 양성 및 우주기술 개발
  -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나로우주센터에 민간 발사장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을 사업화 → 아시아의 우주항으로 도약
- **우주경제 로드맵을 추진하여 꿈을 현실로 구현**

~2027년	2027년	2032년	2045년
우주발사체 추가 발사 (3차례)	발사체 엔진 개발	달 착륙	화성 탐사

06 연구생활 지원금 등을 통해 젊은 과학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재는..

▶ **이공계 석·박사를 비롯한 고급 인력의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수 인재의 대학원 진학과 포닥과정 연계를 위한 유인·지원이 미흡**

* 2019년 ~ 2029년 이공계 대학원생급 인력 부족 전망 (고용정보원, 2020년) : 약 6만명

– 대학원생에게 생활비, 등록금 등을 지원하여 인력을 유치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대학원생 연구생활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학업장려금 제공
– 우수한 석·박사 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 **포닥(박사後 연구원) 지원**

– 과학기술인 공제회 가입 확대
– 국내·외 연수를 확대하고, 우수 교수와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활성화

07 기초와 도전적 연구에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현재는..

▶ **과학기술 추격국에서 G5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기초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도전적인 대형 연구개발이 필요하나, 높은 성공률에 비해 실질적 성과는 낮은 상황**

– 한편, 부처별 지출은 급변하고 융합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에 한계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기초연구 확대 및 전략기술 집중 투자**

– 수월성 중심으로 원천·기초 연구를 선정, 지속적으로 지원
– AI,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등 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하여 성장동력 확보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기 위해 글로벌 공동연구 강화

▶ **부처별 칸막이 축소**

– 과학기술 융합에 따라 개별부처 단위 지출구조에서 통합적 심의·배분으로 개선
– 범부처 대형 연구개발 사업 활성화

난치병을 정복하는 미래의 먹거리, 바이오를 육성하겠습니다

08

현재는..

▶ **바이오 산업의 경우, 난치병 극복 등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

* 지난 10년(2014년 ~ 2023년)간 성장률 : IT 9.5%, 자동차 6.4% < 바이오 13.5%

▶ **AI, 빅데이터 등의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한계로 지적되었던 고비용, 장기간 소요, 낮은 성공률의 문제가 극복되는 '바이오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과 기술 격차(미국 대비 3년) 존재**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디지털 바이오 집중 투자**

– AI 등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솔루션 개발
– 바이오 제조 공정을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 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 임상과 연구 역량을 함께 갖춘 의사과학자 육성

▶ **사회적 난제 해결**

– 희귀·난치 질환 극복, 치매 치료기술 확보,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개발 등

▶ **글로벌 바이오 협력**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계 최고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 예) 서울대병원 임상데이터 · 연구 + MIT 바이오·디지털 기술

▶ **첨단의료 복합단지 활성화**

– 산·학·연·병원 간 연계를 통해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성과 확대

게임 체인저,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기틀을 강화하겠습니다

09

현재는..

▶ **성장 정체를 돌파하여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고, 각종 사회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해법 중 하나로 인공지능(AI) 대두**

– 한편, AI가 모든 분야에 확산 중임(화장품 회사 로레알이 2024년 CES 기조연설)
* AI 시장(2022년, IDC) : 글로벌 $4,260억(연평균 20%↑), 국내 $18억(연평균 15%↑)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AI 기술개발과 핵심인재 양성**

– 차세대 생성형 AI를 비롯한 미래 유망분야에 도전적으로 연구
– AI 대학원 등을 통해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해외 유수대학과 협력

▶ **학습용 데이터 확충**

– 법률, 의료, 교육, 교통, 로봇 등의 분야에서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함께 유통하고 거래하는 플랫폼 가동

▶ **AI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
–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 평택(생산 + 연구), 판교(설계 + 연구 + 교육) 등

▶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확산**

* AI를 통한 유사 판례 제시, AI 기반의 질병 예측 · 심리 상담, AI 교과서, 지능형 CCTV, 기지국 접속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인파 관리, 자동 번역 등

원자력 안전, 국민의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

10

현재는..

▶ **원자력이 산업과 에너지 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중추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감과 공포를 갖고 있음**

* 유럽의회는 2022년 7월 6일,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지속 가능한 녹색분류 체계 (Green Taxonomy)에 포함하는 입법안을 가결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원전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 강화**

– 정기 검사에서 연중 상시 검사로 전환
– 취약설비와 이상징후는 심층 검사

▶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공개**

–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에 따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
– 원전 지역별로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 소통 원활화

▶ **생활주변 방사선 관리**

– 생활 환경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부터 국내 유통, 폐기까지 단계별로 철저히 감시

K-콘텐츠 집중 지원을 통해 K-콘텐츠의 세계적 재도약에 앞장서겠습니다

11

현재는..

▶ **글로벌 OTT·콘텐츠 확산으로 K-영상콘텐츠 위기 심화**

▶ **IP 확보, 저작권(창작자 권리 등) 보호, 콘텐츠 산업 재정난 등 현안 부각**

▶ **K-콘텐츠 수출액 사상 최대 132억4천만달러(약17조4천억원)로 같은 기간 이차전지(99억9천만달러), 전기차(98억3천만달러), 가전(80억6천만달러) 등 주요 품목 수출액보다 높아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세계1위 웹툰 종주국으로서 '만화·웹툰' 산업 집중 지원**

– 세계적 국내 웹툰 플랫폼 지원
– 만화·웹툰 국제적 행사 개최 지원
– 현장 중심의 만화·웹툰 인력 양성
– 법 전면 개정을 통해 산업 발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및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 **K-콘텐츠의 세계적 진출 확대를 위한 재제작 제반 지원 확대**

▶ **경쟁력 있는 '슈퍼 IP' 확보 집중 지원**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을 통해 안정적 제작 기반 구축**

▶ **창작자 권리 강화 적극 지원**

–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민간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확대 및 형사 처벌 강화
– 창작자·제작사·플랫폼 참여 상생협의체 운영, 합리적 보상방안 논의

▶ **「만화·웹툰산업진흥에관한법」 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체험형·체류형 관광 지원으로 대한민국 관광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12

현재는..

▶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산업의 다양화 활로 개척 필요**

▶ **관광 산업 장기 적자 및 인·아웃바운드 수요 격차 심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자전거 관광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 전국적으로 구축된 자전거 관광 코스와 주요 관광지·지역 특화 프로그램·편의 시설과 연계

– 신규 코스 개발 및 안내체계 구축 및 인증제 운영 지원

▶ **K-콘텐츠 특화 체험형·체류형 관광 산업 육성**

– 전국 주요 거점 지역 중심 K-POP·드라마·영화·웹툰 스튜디오, 촬영지, 아카데미 등 체험형·체류형 관광 산업 육성

– e스포츠팀 연계 체험형 관광 산업 육성 지원

▶ **지역 특화 치유 관광·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 지역별 특화 치유 관광 프로그램 기반 조성 및 운영 지원, 업무 연계 '워케이션' 특화 관광 프로그램 지원 강화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투자활성화로 수출강국 도약

- 반도체산업에 혁신적 지원으로 세계 1등, 수출 강국을 이끌겠습니다.
- 투자특(特)국! 투자하기 좋은 나라,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에너지 강국! 에너지 수급은 합리적으로, 에너지 복지는 두텁게 하겠습니다.
- 통상대국! 수출 G5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반도체산업에 혁신적 지원으로 세계 1등, 수출강국을 이끌겠습니다

01

현재는..

▶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하에 경쟁국들은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
* 美 2027년까지 약75조원, EU 2030년까지 약62조원, 日은 투자에 40% 넘는 보조금 지급 등

▶ **한국은 세액공제 정도 지원으로 경쟁국의 대응에 비해 미흡**
또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도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원만하지 않은 상황

▶ **수출의 20% 대인 반도체 수출이 국가 수출입 규모를 좌우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므로 경쟁국들의 사활을 건 국가적 지원을 고려한 지원대책 절박**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국의 지원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 지급 추진**

▶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신속 지원**

▶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적기 완성**

▶ **소부장 포함 차세대기술 R&D 등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확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개정**

투자특(特)국!
투자하기 좋은 나라,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02

현재는..

▶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상존, 저출생 고령화, 기업가 정신 실종,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등으로 인한 투자 감소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 국가투자 지주회사(전략적 국부펀드, 한국판 테마섹(K-Temasek))를 신설하여 핵심 공급망·첨단산업 경제 안보 강화
-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최신 수준에 맞추어 개선
-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조성하여 지방·수도권 저개발지역 투자 유인
- 기업가 정신을 정규 교과 과정에 반영

▶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 대학 등 산업계 주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 강화
- 첨단산업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확대
- 은퇴인력 재취업 기반 강화
- AI 시대 '국민 1인(人) 1기(技)' 확보 지원

▶ **주력산업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
- 바이오, 우주·항공, 차세대 디지털, 그린 산업, 식품 등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 **산업단지를 주력·첨단산업의 허브로 개조**
- 산업단지별 마스터플랜 수립,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역할 분담 지원
- 편의·복지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 등 인프라 확충

에너지 강국!
에너지 수급은 합리적으로,
에너지 복지는 두텁게 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문재인 정부의 이념지향적인 무모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국민은 요금 인상으로 고통**

▶ **무탄소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비중 축소에 따른 비용 정산, 요금 체계 등 새로운 에너지 시장 질서 정립이 지연되면서 투자 애로**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어 상생하는 에너지 믹스 확립**
-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신규 원전 건설 추진
- 재생에너지는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뒷받침
- 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뒷받침할 인증시스템 등 시장질서 구축
-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 **시장원리와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력시장·요금 규제 거버넌스 확립**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원전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를 위한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점 수주국 대상 세일즈 활동 강화, 자원보유국 대상 SMR과 연계한 자원외교전략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수출 성과 창출
- 일감 공급, 금융, 설비투자 등 원전 공급망 중소기업 지원 강화

▶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 수소, 배터리, CCUS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지원 강화**

▶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

통상대국! 수출 G5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고금리와 경기침체, 美中 경쟁,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위기 상시화 및 글로벌 안보 위기 등 세계 경제·통상 환경 급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우리나라의 통상 영토를 지구의 90%까지 확장**

– IPEF, CPTPP, RCEP 참여 및 성과 도출로 통상 연대 강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신흥국가 대상 전략적 무역통상협력관계, 경제동반자협정 등 FTA 다변화

– 주요국가 대상 기존 FTA는 협력 범위와 수준을 고도화

– 디지털·그린 등 새로운 통상질서 확립 주도적 참여

▶ **수출 G5 국가로 도약**

– 해외전시회 및 수출 지원 바우처 확대

–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 서비스산업을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

– 중소기업 수출기여도 확대

– 청년무역인력 1만명 양성, 수출 스타트업 전담 지원체제 구축

– 해외인증 범부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확대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산업육성 위한 대못규제 개혁

-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로 경제현장과 가정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국회부터 규제개혁에 앞장서 국회 입법의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민생 고통을 덜어주는 규제개혁을 확대하겠습니다.
-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01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현재는..

▶ **고가의 휴대폰 위주로 출시되고 있으나, 珥「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사업자 간 지원금 제공 경쟁이 활발하지 않아 휴대폰을 값싸게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

* 휴대폰 구입비용(2022년)이 가계통신비에서 1/5 이상을 차지

▶ **5G 요금제의 최저구간이 4만원대 중후반으로 높아,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

* 이의 개선을 위해 2023년 11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휴대폰 구입비 부담 경감**

– 지원금 상한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저렴한 휴대폰 구입기회 제공
–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
– 30 ~ 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 **저가 요금제 출시 및 청년에 대한 혜택 강화**

–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4만원대 중후반 → 3만원대) 및 소량 데이터 구간의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 제공

▶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여 경쟁을 촉진**

– 설비 제공, 로밍, 단말기 유통 등 지원

▶ **공공 와이파이 확대**

– 미구축 지역과 시설(예 : 전통시장, 주택가 주변공원, 고속·마을버스 등)에 설치
–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WiFi를 10배 이상 빠른 WiFi 7 등으로 대체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로 경제현장과 가정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02

현재는..

- **전기요금에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과 경제에 부담을 더하는 부담금으로 특히, 요금 인상 때마다 인상분에 비례해 추가 징수되며 부담 가중**

- **전력기금 제도 도입의 목표 달성보다 문제점 노출**
  - 기금 과다적립(5조원 이상), 부실운용(불법 집행사태), 다른 회계로 기금 전출 (최근 3년 평균 1.5조원)
  - 2023년 기준, 전력기금 사업비 2조3989억원 중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지급 등에 집행액 집중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 추진**

- **전력기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 확대**
  - 발전소·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에너지복지 등 공공성 강화
  - 원전 생태계, SMR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인재양성 지원 확대

-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부터 규제개혁에 앞장서 국회 입법의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증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실한 상황**

-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됐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 가능**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의원 발의 규제법안 '사전 규제영향분석' 도입**

- **국회 통과 규제법안 '사후 규제영향평가' 도입**

-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 도입**
  -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고, 주기적 재검토 통해 규제 연장 여부 결정

-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 도입**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규제샌드박스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신속한 규제 개선 조치 한계
-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의 특정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
-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 신산업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 등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05

현재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있어 지역의 자율성이 제약
-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농지 규제 등 지역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들이 부처별로 난립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 권한 강화**
- **지역 주력 산업 등 고려해 토지 규제 전면 재검토**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규제개혁을 확대하겠습니다

06

현재는..

-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각종 규제에 따른 부담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 민생에 더 큰 고통으로 작용
- 시장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도입된 규제들이 민간의 자율성과 활력을 침해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한시적 규제유예 적극 실시**
  -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규제의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적극 실시
-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 확대**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07

현재는..

- 탄소포집활용(CCU)을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하는 등 기존 규제로 인해 첨단기술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약
- 산업단지 입주 연구개발업체의 판매 부대시설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 활동 제약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산단 내 복합시설용지 신설 제약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규제 개선**
  -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 해소
- **산업단지 입주 연구개발업체 규제 개선**
  -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부대시설 허용
- **복합시설용지 신설 규제 개선**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 개선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0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지역 함께 성장

-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 의료 격차 해소
- 문화·디지털 격차 해소
- 지역경제 활력기반 구축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을 통해 거점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전국 GTX 건설로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대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확충하여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을 수정하여 격차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 여객선 항로단절 ZERO를 이뤄내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을 통해 거점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01

현재는..

- 현재 구도심 역세권은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역 단절 현상으로 인해 노후화와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도시발전과 시민 삶의 질 저하 초래
- 철로로 인한 도심 단절은 소외·고립 지역 양산과 기형적 교통체계로 상습 정체 발생 등의 도시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나 기존 도심 정비 제도로는 해결 불가능
- 지난 1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철로 주변 통합개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도시 대상, 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5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사업 비용은 철도부지 상부개발 수익 등으로 충당
  -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사업 간 연계, 국유재산 활용(철도부지 출자), 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개발부담금 감면) 등 지원
-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상업·녹지 등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전국 GTX 건설로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잘못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도심 주택 부족으로 수도권 외곽의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교통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
- 국민들은 기존에 추진되던 GTX 외 추가 노선을 발굴하여 출퇴근 시간을 줄여달라 요구하였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을 우려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선계획을 축소하는 등 적기 도입에 실패(GTX-D 취소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일명: 김부선) 발표)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GTX-A : 2024년 3월 수서 ~ 동탄 구간 개통에 이어, 연내 파주 운정 ~ 서울역 구간 개통**
  - 동탄 ~ 평택 구간 연장, 2028년 全 구간 완전 개통 추진
- **GTX-B·C : 2024년 상반기 착공, 신속한 건설로 B 2030년, C 2028년 개통 추진**
  - B노선 : 마석 ~ 가평·춘천 / C노선 : 덕정 ~ 동두천, 수원 ~ 천안·아산 연장
- **GTX-D·E·F :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2035년 개통 목표로 2027년까지 동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추진**
  - D노선 : ①김포·장기 / ②인천공항 ~ 부천·대장 ~ 강남·삼성 ~ ①교산·팔당 / ②원주
  - E노선 : 인천공항 ~ 대장 ~ 연신내 ~ 광운대 ~ 구리·왕숙 ~ 덕소
  - F노선 : 교산·왕숙 ~ 의정부 ~ 대곡 ~ 부천 ~ 수원 ~ 교산·왕숙 등 순환선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도입**
  - 대전청사 ~ 세종청사 ~ 충북도청 ~ 청주공항(CTX) 선도사업 선정 및 추진
  - 대구경북신공항철도(경부선(동대구) ~ 구미 ~ 통합신공항 ~ 중앙선(의성)) GTX급 광역급행철도로 추진
  - 부·울·경, 호남권 등 지방 광역권 급행철도 신규노선 발굴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대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03

현재는..

- 수도권과 지방 광역도시권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평균 2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며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확연히 저하되고 있음
- 수도권과 지방 광역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통행 편의와 행복 추구권 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함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위례 ~ 과천선, 제2경인선, 신구로선 등 수도권 신규노선 발굴 및 확정 추진**
- **수도권 광역철도 3개 노선 신속개통 및 6개 노선 착공 추진**
  - 개통 : 별내선 모란 ~ 별내, 신안산선 송산 ~ 여의도, 도봉산 ~ 옥정선
  - 추진 :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 용산 ~ 강남, 대장 ~ 홍대선, 고양 ~ 은평선, 옥정 ~ 포천선, 강동 ~ 하남 ~ 남양주선, 송파 ~ 하남선
- **지방권 광역철도 3개 노선 개통 및 5개 선도사업 신속예타 추진**
  - 개통 : 대구권 대구 ~ 경산선, 울산권 태화강 ~ 송정, 충청권 계룡 ~ 신탄진
  - 추진 : 부산 ~ 양산 ~ 울산, 대구 ~ 경북, 대전 ~ 세종 ~ 충북, 용문 ~ 홍천, 광주 ~ 나주
- **K-PASS 대상 확대로 출퇴근 대중교통비 절감 추진**
  - 최저 이용 횟수 제한 월 15회 이상에서 10회 이상으로 대상 확대
  - 현행 만 19세 ~ 34세의 청년 범위를 만 39세까지 단계적 확대
  - 향후 GTX 개통 시, 할인 적용 확대 추진
- **수요가 높은 광역교통 복합환승센터, M버스, 2층 전기버스, 출퇴근 전세버스 등 대폭 확충 및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확충하여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더욱 빠르고 쾌적한 교통망을 제공해야 할 필요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간선도로 중, 가장 극심한 상습 정체 구간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경부·경인 고속도로지만 공간적 문제로 확장이 어려움
- 수도권 메가시티화를 지원하기 위해 1순환고속도로, 외곽에 2순환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나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건설 등 장래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혼잡과 상습 정체 구간 확대 예상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경부고속도로 기흥IC ~ 서울TG ~ 양재IC(26.1㎞) 구간**
  경인고속도로 인천청라 ~ 서인천IC ~ 신월IC(15.3㎞) 구간 지하고속도로 건설추진
  – 2027년 착공 목표
-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용량 확대를 위한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추진**
  – (강변북로) 남고양IC ~ 망원IC ~ 합정IC ~ 용산국제업무지구IC ~ 북한남IC 구간, 양재IC ~ 잠원IC ~ 북한남IC ~ 자양동 구간 지하화 추진
  – (올림픽대로) 개화IC ~ 당산IC ~ 잠원IC 구간, 당산IC ~ 여의도IC ~ 용산국제업무지구IC 구간 지하화 추진
-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사이에 '(가칭) 중순환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하여 1기·2기·3기 신도시 간 교통망 구축 추진**
  – 서울에서 사방으로 구축된 9개 방사축 도로망과 네트워크화
  – 의왕 ~ 시흥 ~ 인천 ~ 김포 ~ 고양 ~ 의정부 ~ 남양주 ~ 하남 ~ 광주 ~ 성남 ~ 의왕 등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05

현재는..

-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조성된 구도심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그 속도가 더디고, 특히 지방 구도심 노후·슬럼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도심 산업쇠퇴, 지역 격차 심화 등 도시문제를 지속 야기
- 그간 정부는 개발이 손쉬운 도시 외곽 건설 중심으로 공급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오랜 삶의 터전인 구도심은 슬럼화 가속
- 문재인 정부에서는 쇠퇴한 구도심 재생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 주도의 '공공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였지만, 강박적인 보존 중심의 정비와 과도한 수용권을 남발한 개발로 인해 결과와 실적은 참담한 수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노후 구도심 정비 사업의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적용 확대**
  – 구도심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까다로운 인허가, 용도지역제에서 자유로운 '규제 FREE ZONE'을 적용한 입체복합개발 추진
  – 기존 주민반대가 많았던 관 주도의 강압적인 '공공도심복합개발' 방식은 일몰
  – 민간과 공공이 상호 보완하며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방식 적용
- **도심복합개발과 철도 지하화 사업 연계**
  – 국토계획법과 도심복합개발법상 도시혁신구역의 성장거점형, 입체복합용도구역의 주거중심형 등 2가지 제도 적용을 통해 환승거점·중심업무지구·유통거점 등 특화 개발
-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직장·주거·편의시설·공원 등 도보 15분 생활이 가능한 미래형 압축도시로 획기적 정비**
  – 역세권 컴팩트시티, 메가시티 거점, 환승역세권, 대규모 이전적지, 준공업지역, 도로·철도 지하화 상부공간, 철도역 주변 유휴부지 등의 다양한 지역에 적용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을 수정하여 격차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06

현재는..

-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기조로 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 ~ 2040년) 마련**
  -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수도권정비계획, 지역별 종합계획 등 공간계획과 도로, 철도 등 교통망 계획을 시행 중
- **미래 상황변화에 맞춰 인구감소에 대응한 압축적인 공간 조성과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제시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격차,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제시**
- **지방권의 특화 발전을 위한 산업배치, 도로·철도 등 교통망 정비를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
- **수도권도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해소, 직주근접 활성화 등 새로운 공간계획 재설정 추진**

여객선 항로단절 ZERO를 이뤄내겠습니다

07

현재는..

- **민간선사가 사업성 부족으로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1956년~)하여 국고여객선을 투입하고 운항결손액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 중**
- **여객선사의 영세성과 사업자 변경(3년 주기)으로 서비스·안전 개선 유인이 낮아 이에 대한 섬 주민의 개선 요구가 지속**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국가보조항로 관리를 공공기관에 위탁 추진**
  - 연안여객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
-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격차 해소**
  - 주민수가 적거나 육지와 멀어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 운영
- **항로 두절 차단을 위한 예비선 추가 확보 및 권역별 배치**
  - 권역별로 배치하여 국가보조항로는 물론, 민영항로 운항 중단 시에도 즉각적인 대처
-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이용**
  - 모바일을 통한 여객선 예매·발권, 육상교통과 여객선 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승하선 체계를 고도화

사회복지시설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사 처우를 강화하겠습니다

08

현재는..

-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분포 편차로 거주지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불균형 발생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나 개선 잰걸음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지역 간 사회복지시설 편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확대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인력 확충, 인력 기준 현실화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량 경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추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의료 격차 해소

-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수도권 중심의 의료 집중 가속화 및 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근무 기피 현상으로 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 필요**
-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비필수 의료분야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완결형 의료 전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을 막고 필수의료 육성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지역의대 신설 추진**
-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믿고 찾는 지역 공공병원 육성**
  -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의 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
  - 초고령화 지역·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ICT·모바일 장비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협진 및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본격 활성화
-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전국 확대 및 구급대원 · 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 제도화**
  - ICT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AI 구급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등 스마트 EMS 시스템 확산 통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02

현재는..

▶ **여성농업인은 여성으로서 질병뿐만 아니라, 장시간 농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 농약중독 등 특수 질병에 노출**

* 여성농업인 유병률(2022년, 7,458명) : 심혈관계(26.1%), 골절위험도(항목별 23.6 ~ 24.9%), 호흡기(9.7%), 근골격계(부위별 2.3 ~ 9.9%), 농약중독평가(항목별 6.2 ~ 20%)

▶ **농어촌지역은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거동불편 주민 및 교통 취약 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음**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단계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전국 규모로 확대 시행**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수혜지역을 대폭 확대

– 중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 **2024년부터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농어촌 왕진버스 사업 추진**

– 의료단체 또는 병의원 등과 협업하여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지역 중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 전체로 확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정보기술과 의료 접목을 통한 의료 접근성 · 편의성 도모 및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여 질환 범위,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 해소

– 거동 불편 노인,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약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해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

▶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

– 전문가와의 논의와 비대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모델 구축

– 비대면 진료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문화·디지털 격차 해소

- 문화로 지역 격차를 해소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문화로 지역 격차를 해소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01

현재는..

- **수도권 외 지방의 문화 향유 기회 부족**
- **수도권 외 지방의 문화 향유 기반 시설, 수준 높은 공연·전시 프로그램 부족**
-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으로 지방 주요 거점 도시의 인구 유출 심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전국 낙후 공공 스포츠·문화 시설을 지역 복합 문화 · 스포츠 랜드마크로 개발**
  - 전국 지역별 월드컵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복합 문화·스포츠 시설 전환
  -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생활 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e스포츠 활동, 지역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북카페, 키즈카페, 쇼핑 공간 함께 조성
  - 재택·휴가지 근무 등 다양해진 근로 방식 반영한 워케이션 맞춤형 공간 조성
- **전국 거점 지역의 문화 향유 확대 지원**
  - 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국립 문화·예술 시설의 전국 분관 확대
- **전국 문화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 지역에 폐교, 유휴부지 활용 문화예술 콘텐츠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제공·지원할 수 있는 '국립예술지원센터' 조성

▶ **국립예술단체 전국 순회 공연·전시 확대를 통한 국민의 만족도 높은 문화 향유 확대**

▶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콘텐츠(스토리, 명소 연계) 특화 도시·축제 지원 확대**

– 지역 예술가·예술단체·프로그램 육성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 혁신도시, 농산어촌지역 등 문화향유 기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수요·특성 반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늘봄학교 연계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지역 격차 해소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02

현재는..

▶ **디지털과 AI를 이용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불편을 겪게 되나, 어르신, 장애인 및 농어촌 등의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큰 편**

–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워 주문도 못하고 매장에서 나옴

* 일반인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2022년, 과기정통부)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평균
69.9%	78.9%	82.2%	95.6%	76.2%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취약계층 전용제품 출시 지원**

* 예) 디지털 촉각·점자 디스플레이, 장애물이 없는 보행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어르신 전용 키오스크 등

▶ **학교와 지역의 디지털 접근권 확대**

– 학교에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디지털 교과서 보급 · 확산
– 지방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는 '스마트 빌리지' 확대

▶ **다문화 가족에게 AI 기반의 자동 통·번역 및 한국어 학습 서비스 제공**

▶ **「디지털포용법」 제정**

– 디지털·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전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지역경제 활력기반 구축

-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규제완화, 쌀값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 농가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 어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세컨드 홈 활성화로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부활하겠습니다.
- 대학생 아침밥, 서민 국산 농수산식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 탄소중립 산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든든한 수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육성으로 지역의 혁신과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인구절벽시대, 이주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배달합니다.
- 기업의 지방 이전 혜택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규제완화, 쌀값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01

현재는..

- 세컨하우스 구입시 2억원 미만, 150㎡이하 농촌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제한적 세제혜택
- 주말체험 영농과 귀농·귀촌 준비하는 사람은 대부분 6평짜리 농막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나 농막은 주거용 시설이 아니어서 불법문제, 환경문제 발생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중 3ha 이하는 식량안보상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가 바람직하나 민원 발생 및 행정비용, 절차 부담 등으로 지자체에서 해제 신청에 소극적
- 농촌에서는 저렴한 도시가스는 인입시설 공사비용이 커서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사업자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LPG 등 더 비싼 에너지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 산지 쌀값이 지역농협의 재고부담 등으로 19만원 중반대까지 하락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농막을 대체하여 임시숙소나 주거에 적합한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하되 절차는 간소화된 '(가칭) 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
  - 농촌체험주택을 「농지법」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 및 「건축법」 시행령 적용
- **지자체의 개발수요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진흥지역 일괄 해제**
- **마을별로 거점형 가스 공급설비(LPG)를 설치하여 해당 마을에 가스를 공급하는 농촌형 생활에너지 사업 추진**
  - 농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난방비 추가 지원 추진
-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20 ~ 21만원/80kg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농가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농업 재해복구비가 실제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하여, 큰 재해를 당한 농가가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국고보조 비율이 50%로 낮아 지자체 등의 불만 요인
-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4년 말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 도래하여 연장 필요
- 청년창업농 대상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1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농이 농촌에 정착하는데는 통상 3 ~ 5년 소요되어 지원금 기간 연장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을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추진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 기한 연장
- 청년창업농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최장 5년으로 연장 및 청년농 보금자리 주택 확대
-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 추진
-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확대

어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어촌은 열악한 생활 인프라, 낮은 삶의 질 만족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 증가로 정주 여건이 취약하고 어촌·섬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멸 위기 가속
-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기존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5년간 300개소 선정), 귀어귀촌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한 측면이 있음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 거점 어촌에 민간투자 유치 및 개발(수산인프라, 해양관광 등)을 활성화를 위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 **임대형 스마트양식단지 조성**
  - 미이용 간척지, 발전소 인근(온배수 활용)에 임대형 스마트 양식단지를 전국에 10개소 조성, 청년 등 귀어인에게 저렴하게 임대
- **어복(漁촌福지)버스 운영**
  - 교통, 의료 여건이 불리한 섬이나 어촌지역에 찾아가 복지(의료·행정·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운영
- **섬 닥터 도입**
  - 섬 지역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비대면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섬 닥터 도입

세컨드 홈 활성화로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부활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대한민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1주택자에 대한 혜택만 계속 늘려와 수요가 높은 특정지역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 초래**
  - 이러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특정지역 매물잠김, 수도권 가수요 증가, 지역소멸 촉진 등 연쇄적 부작용 발생

- **현행 다주택자 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와 임대주택·감면주택·일시적 2주택 여부 등 용도 및 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 중**
  - 복잡한 산정·합산 방식에 따른 혼란과 위장 전입 등 편법행위 야기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
  -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유숙박(airbnb)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주택 수 제외로 중과세율 적용,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 취 · 등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 확대 추진

- **비수도·비광역·비도심 읍·면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대학생 아침밥, 서민 국산 농수산식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05

현재는..

- **대학생 아침밥 결식을 방지하고 쌀 소비확대를 위해 학생 천원, 정부 천원, 나머지 대학부담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 중이나 대학의 부담이 커서 확대에 애로**

- **취약계층에 대한 쌀(나라미) 등 일부 지원은 있으나 농수산식품 전반 지원은 없음**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대학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단가 2배 인상 등 사업 규모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식품바우처와 식생활 교육 지원**

친환경 축산, 탄소중립 산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06

현재는..

- **대규모 공장식 축산은 건강하지 못한 축산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가축질병 발생 위험도를 높이고 축산악취, 폐수 등 인근지역 주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규모 곡물수입, 축산폐수 및 악취 발생 등 저탄소 국가적 과제에 역행
- **산림이 탄소저장기능 등 공익가치가 크나 이를 보전·고양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
  - 특히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은 산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미흡
-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을 일반 산림정책조직이 병행하고 있어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스마트축사 보급확대 및 ICT기반 가축사양관리 강화로 축산업 선진화 및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 지원**
  -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구축, 무인축사 등 미래형 축산기술 연구개발 지원
  - 축산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가축질병에 신속히 대응, 조기 차단할 수 있는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축산업 시스템 구축**
  - 경축 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확대
  -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도입, 저탄소사료·저탄소사양관리기술 개발 보급
- **탄소저장 등 산림의 공익가치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에 대하여 '(가칭)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추진**
- **산불, 산사태,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 관련 재난 대응 시스템(조직, 장비, 예산)을 일반 산림정책에서 분리하여 전담체계로 선진화**
- **「산림재난방지특별법」 제정**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든든한 수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07

현재는..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소비자 불안 여전히 일부 상존**

  * 방류 후 현재까지 우리 해역(243개 정점 해양 모니터링)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산물 방사능 검사(2.2만건)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

- **기후변화 영향으로 수산물 생산감소, 높은 수산물 물가 지속**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어업인 지원 확대**
  -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 상향 조정, 어선원생활안정자금 확대
  - 근해채낚이 등 오징어 생산업계 감척 사업 확대
- **어업회사법인, 어업기업 등의 세금 부담 완화 추진**
- **수산정책보험 국고 보조 확대**
  - 어선원 및 어선보험 : 순보험료 국고보조 미지원톤급에 대한 순보험료 국고 지원, 부가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 양식보험 : 순보험료 국고보조 상향, 고수온 관련 특약 추가지원액 별도 지원
-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추진**
  - 기존 6종의 직불금 단가 인상 및 신규 직불제(기후변화적응 직불제, 탄소중립 지원 직불제) 도입 등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육성으로 지역의 혁신과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08

현재는..

▶ **지역이 산업·생산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화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한계**

–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지역의 연구개발 활성화**

– 지방의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으로서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

▶ **지역의 연구개발 전담기관 강화**

– 연구개발지원단(17개 시도 소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도의 혁신적 성과 창출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R&D 기획과 집행, 조사 분석, 네트워킹 등 수행

▶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

– 지역내 대학·연구소·기업과 클러스터의 연계를 강화

인구절벽시대, 이주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배달합니다

09

현재는..

▶ **'인구 감소 사회' 충격을 최소화하는 적극적 이민정책 수립 시급**

– 인구고령화에 직면한 해외 각국에서도 숙련 외국인력 유치 경쟁 심화로 전담조직을 통해 이민정책 역량 강화 추세

▶ **이민정책 전담조직 없이 각 부처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체계적 대응 한계 및 중복·비효율 발생**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지역이민관리 전담체계 구축**

– 해외 인재 유치 및 우수 인재에 대한 지역 정착 유도

–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 경제활동 촉진 → 신규 인구 유입' 선순환 구조 실현

– 지역이민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조직, 예산 확보 등 지자체 지원체제 구축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로 범정부차원의 통일된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 각 기능별 소관부처 인력을 파견(별도 정원)받아 다부처 협업형 기관 운영

–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통일된 관점에서 계획 수립

▶ **「정부조직법」 개정, 「(가칭) 지역이민 특별법」 제정 등**

기업의 지방 이전 혜택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0

현재는..

-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나, 미흡하다는 평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0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시민안전 건강지킴

- 민생·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응 강화
- 촘촘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스마트 국민 안전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민생·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응 강화

-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전세사기를 야기한 임대차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
- 가짜뉴스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 불법·유해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범죄로 상처입은 피해자를 위해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헌법 제27조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진술보장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01

현재는..

▶ **반사회적·반인륜적 흉악범죄로 무기형 선고받은 범죄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고,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의 미비로 처벌이 경미해 국민적 불안 확산**

▶ **서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각종 민생침해범죄 역시 처벌이 경미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완전한 박탈이 어려워 범죄 동기 차단 미흡**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흉악범죄 처벌 강화**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로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 공중협박죄 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 엄중 처벌

▶ **민생침해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 제한**

–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 필요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

▶ **「범죄수익환수기본법」 제정 등 범죄수익 발본색원·박탈**

– 「범죄수익환수 관련 통합기본법」제정으로 산발된 법 규정을 정비하고 실무적 혼선 방지

–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범죄수익이 특정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으로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 범죄자 외 제3자가 범죄수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원 판단으로 범죄수익 추정 금액 몰수 가능

▶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범죄수익환수기본법」 제정 등**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02

현재는..

▶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대폭 증원 및 전담기구 설치 추진**

–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의 전문인력 확충 및 시·도청 전담수사팀 강화

– 사이버를 통한 마약·성착취·불법 도박 상시 감시 및 단속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다각적 추진**

–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범위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

▶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온라인상의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 광고 집중 단속 및 법적 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삭제·차단

전세사기를 야기한 임대차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임대차 3법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돼 4년 계약으로 예상한 임대인들은 전세가 상향**
- **전셋값이 폭등하며 전세대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상향하자, 시세가 불투명한 빌라를 중심으로 무자본 갭투기 성행**
-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부터 금리가 상승하자 월세 선호 현상 발생, 전세 물량 증가와 함께 전세가가 하락하며 대규모 전세피해 발생**
-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급증,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며 임대차 시장의 왜곡과 국민의 사적자치 원칙을 지나치게 훼손**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실거주 증명 방법이 모호해 임대차 시장 혼란 가중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과 전세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 추진**
- **재계약 시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내용이 절대적으로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
-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을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가짜뉴스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04

현재는..

-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허위·조작 콘텐츠가 국민을 호도하고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등장**
  - 최근 생성형 AI 기술에 의해 딥페이크, 딥보이스가 더욱 늘어나고 있음
    *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거부를 독려하는 가짜 목소리를 담은 전화,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사진 등 유포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한 패스트트랙 활성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마련된 가짜뉴스 신고창구를 통해 신속한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
-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통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력
  -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통체계 마련
  -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 참여) 운영
-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콘텐츠 대응**
  - ‘AI 생성물 식별 표시제(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에 워터마크 포함 등)’ 도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불법·유해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5

현재는..

▶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자살·마약 및 성착취물 등 불법·유해 정보들이 여과없이 만연하고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 특히, 클릭 한 번을 통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정적·폭력적 콘텐츠가 피해자 및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2차 피해로까지 연결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심의하여 차단**

– (현재) 대면 심의 원칙(평균 30 ~ 50일 소요) → (향후) 서면 심의(1일 소요) 허용

▶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강화**

– 상시 모니터링과 자율 점검을 통해 불법 · 유해 정보에 적극 대응

▶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센터 설치**

– 온라인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게시물 삭제·차단 방안을 안내
–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분쟁조정 알선 수행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 온라인 성착취 영상물의 삭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삭제 요청기관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범죄로 상처입은 피해자를 위해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06

현재는..

▶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존감 하락, 좌절감,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자립성 저하 문제 우려**

– 범죄피해자들이 범죄피해로 인한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중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협에 대해 직접 연락·접촉 등이 아닌 경우 처벌의 공백 발생**

– 고위험 범죄요인에 대한 관리 · 치료 체계가 미흡하여 범죄 예방 및 추가 피해 방지 위한 개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법정형 상향 및 직접 연락 등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

▶ **강력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해 주소지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 **범죄피해자 법률서비스 등 지원강화**

–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2024년 7월 신설 예정) 운영 지원 강화로 대한 법률지원, 고용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 피해자 국선변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담 변호사 확충 및 비전담 변호사 보수 개선
– 국선후견인제도 법제화로 가족 방임·학대 피해자 등 후견제의 사각지대 해소

▶ **「(가칭)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 고위험 범죄요인 관리**

– 불특정 다수 대상 반복적 성폭력범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및 약물치료 의무화

▶ **「형사소송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

07 헌법 제27조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진술보장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 **헌법 제27조에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보장권을 명시**

– 그러나 현재 재판 장기화로 범죄피해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을 초래

–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피해자를 배제한 법관–검사–가해자 중심 재판 편의적 사법제도라는 지적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범죄피해자 형사소송절차 참여 확대 등 진술권 보장**

–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해 증인 출석 외 서면의견서 제출 등 피해자 진술 범위 및 방법 확대

–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결과 통지 의무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피해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피해자 기록열람권 강화

– 법원 내 피해자실 설치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통한 보호 및 재판 방청권 보장

– ‘검수완박’ 악법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보장

▶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전문화된 사법서비스 제공**

–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확대 설치

– 전문법원(가정법원, 회생법원, 해사법원 등) 확대

–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디스커버리제도(진술녹취제도) 도입

– 헌법재판절차 조사기일 활성화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등**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촘촘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전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 응급한 국민 생명, 국가가 책임집니다.
- 국민의 건강을 세밀하게 지원하고 비용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마약, 도박, 알코올 등 급증하는 중독문제에 예방 및 치료회복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ICT 기반, 만성질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를 육성하여 글로벌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환자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을 드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HPV는 현재 만 12~26세 여성을 대상으로 HPV 2·4가 백신 접종 중
- 6세 이하 영유아 대다수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 감염증인 RSV는 최근 산후조리원등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집단감염 사태 빈발
- 대상포진은 장년층 및 어르신이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발병시 삶의 질 저하
- 전체 독감 사망자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고령층 독감은 폐렴, 패혈증 등 치명적 합병증을 초래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어린이 HPV 백신 남아 확대, 9가 전환 추진**
  – 남녀의 암예방에 효과적인 HPV 백신을 남아 확대 및 9가 전환 추진
-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국가예방접종 도입 추진**
- **50세 이상 장년층 및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접종비 지원**
  – 65세 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50세 이상까지 5세 단위로 지원
- **고령층 독감 예방을 위해 어르신 맞춤형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추진**

전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정신질환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 복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계성을 강화하고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청년·학생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적 자살예방 기반 구축

▶ 정신응급 현장대응 강화 및 치료환경 개선 등 인프라 확대

▶ 마약·알코올 등 중독치료 및 재활 인프라 확대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복지지원 확대

▶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지자체 정신건강 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양성제도 개선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관리·공시제도 추진

응급한 국민 생명, 국가가 책임집니다

03

현재는..

▶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도시의 경우 119구급대의 응급 대응 능력이 환자 생존에 결정적이나 장비·인력·관련 처치 권한에서 한계

▶ 대도시에서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례 발생, 장비·인력 보강을 통한 응급 대응능력 향상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다목적 중형 구급차 등 장비 확충

–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가 용이한 다목적 중형 구급차(소방서별 1대 이상) 및 임산부 등 이송에 적합한 전동형 들것 등 첨단 구급장비 보강

– 119 구조구급대의 응급의료 기금 사용 비율 확대 추진

* 응급분만시 탯줄절단, 심폐소생술시 약물투여 등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14종 → 19종) 전면시행(2025년 1월 1일)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보강으로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예방

–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송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

* 환자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한 뒤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즉시 이송하며,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

국민의 건강을 세밀하게 지원하고 비용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의료비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평소 관리가 어려운 건강 영역을 발굴,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도모 및 부담 경감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소아 · 청소년 1형 당뇨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정특례 중증난치질환 대상으로 1형 당뇨 지정, 보건교사의 인슐린 투약행위 확대
    1형 당뇨를 건강장애로 인정하여 학교 근거리 배정, 보건교사 대상 1형 당뇨 교육
- 2030 청년에게 빈발하는 난치성 피부질환인 화농성 한선염 등 치료제가 있는 중증 피부질환에 대해 중증도 2단계부터 지원 및 급여기준 기간 확대
- 비만치료제의 급여화를 통한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
-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지원 확대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 → 4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확대
  -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확대
  - 보청기 의료혜택 확대
  - 건강보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추진
- 국가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 검사 대상 확대 및 검진주기 단축(위험인자 발견된 경우)
- C형 간염 검사 국가건강검진 포함 및 C형 간염 퇴치 추진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05

현재는..

- 독감, 감염병 유행 등으로 환자 수 증가시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제 생산 및 공급 불안정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발생 및 장기화
- 어린이, 노인 등 대상 일부 의약품의 부족 현상 장기화 및 글로벌 제약사의 시장 철수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 시급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
-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약사법」개정
-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및 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
-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 지원, 비축 확대
  -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필수의약품 국가비축물량 확대
  -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로 원가보전 지원
- 소아, 노인 등 대상 필수의약품의 개발·제조 인센티브 강화
  - 소아 및 노인용 필수의약품 개발시 신속심사 적용 및 별도의 약가 가산 부여
  - 필수 백신원료·의약품 국산화 및 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마약, 도박, 알코올 등 급증하는 중독문제에 예방 및 치료회복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06

현재는..

- **온라인 도박, 마약과 알코올 중독 등은 치유가 필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치료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잦은 재발로 문제의 심각성이 심화**
- **급증하는 중독문제에 대하여 공중보건기반의 예방 및 치료회복서비스 체계와 서비스 구축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
  - 각종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치료기술 개발, 치료지원, 회복서비스 인프라 구축, 회복서비스 지원
- **생애주기별 중독선별과 조기개입 체계 구축**
  - 마음건강서비스,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 등에 청소년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항목 추가
  -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온라인 도박 등 디지털미디어 중독문제, 청년기에 알코올과 마약 등 흔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선별과 일차 상담 제공 체계 구축
- **정신건강중독상담 전문인력 양성**
  -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중독상담 부분을 추가하고 치료보호 기관,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약물중독상담 및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중독치료전문병원 지정 및 중독재활과 의무 연계제도 도입**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07

현재는..

- **혁신 신약은 환자 생명 연장과 직결되는 암, 중증·희귀질환자의 생존율 제고에 크게 기여**
- **국민 대다수가 암 등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희망**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혁신치료 기법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
  - 항암제, 중증 및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급여 지원
  - 환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 및 치료제 개발(정밀의료) 지원
- **중증·희귀질환자 본인부담금 최소화**
  - 대체약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검토
  - 중증·희귀질환계정 도입으로 급여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재정 별도 운영 검토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향 추진
-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 마련**
  -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마련
  - 국내외 혁신 신약에 대해 충분한 가치의 약가 반영

ICT 기반, 만성질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8

현재는..

-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국민 의료비 적정화 필요**
  - 근거기반 진료지침(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에 따른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 조절율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예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가정형고혈압관리 등 건강보험 적용 추진**
- **국민 개개인이 손쉽게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를 육성하여 글로벌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09

현재는..

- **정밀의료는 고유 유전자 분석으로 질병을 진단·예방·치료하는 미래의학의 핵심 수단**
- **고령 인구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료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필요성 증대**
- **환자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위한 정밀의료 지원·투자는 글로벌 흐름으로 자리매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정밀의료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 마련**
  - 전자의무기록, 건강보험 DB 등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 위한 법·제도 정비
  - 「(가칭) 정밀의료법」,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 **개인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 보건의료데이터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결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의료기기·의약품 등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
- **국가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밀의료 기술 개발 지원**
  -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미래 데이터 발전소 구축
  - 100만명 규모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 건강정보를 통합해 구축·개방하여 유전자 치료제 산업 육성
- **지역거점 첨단 스마트병원 육성**
  - ICT를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스마트병원 육성
-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첨단 로봇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환자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10

현재는..

▶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으로 연구목적 임상 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연구대상자가 아닌 환자의 세포·유전자 치료 가능**

– 그간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해외 원정을 떠나던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은 물론,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의 임상 및 상업화 등이 가속화될 전망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지역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세포처리시설, 연구인력 등 인프라 확충**

–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부상하여 급증하고 있는 재생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세포처리시설, 연구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

▶ **권역 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조성**

– 비임상 시험 및 임상연구부터 환자 치료까지 실시하는 원스탑 전주기 인프라 구축
– 세포처리시설·세포특성분석센터 설치, 현장교육 지역센터 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역 완결형 세포 공급망 구축 지원
– '(가칭) 지역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계획을 사전심사
– 지역 실시기관들의 임상연구에 대한 CRO 및 비임상 시험 비용 지원

▶ **권역 클러스터 간 공동연구·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

– 첨단재생의료 품질관리 표준화·관리 및 전국 통합정보망 구축하고 중앙에서 교육센터 지원

▶ **첨단재생의료 세포 · 유전자 치료기회 확대**

– 지역 산업계와 연결되는 관련 기관간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까지 연계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을 드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11

현재는..

▶ **국민 일상 속 자발적 스포츠 활동 지속 유인 방안 제공 필요**

▶ **국민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필요**

▶ **국민 수요에 비해 쉽게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부족**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추가 추진**

▶ **국민 체육활동 직접 지원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야외 스포츠 활동(자전거, 러닝 등) 기록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활동 인증범위 확대

▶ **전국 주요 거점 지역 '에어돔 아레나' 구축을 통한 다목적 문화·스포츠 시설 구축**

▶ **지역별 인구 구조에 따른 맞춤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확대**

– 생활밀착형, 시니어친화형, 학교형, 유아친화형 등 지역별 맞춤형 체육시설 확대

▶ **늘봄학교 등 연계하여 방과 후 양질의 유아·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체계화**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스마트 국민 안전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재난안전·소방산업 육성으로 국민 안전을 높이고 국가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01
공약공모전
대상

현재는..

▶ **중대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 등에서 주소지가 노출되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사례 발생**

–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들이 2차 가해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례 다수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피해자들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생활고를 겪는 중**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 실거주지가 노출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는 안심주소가 기재되어 실제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음

※ 대상자의 실거주지는 복지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전산 시스템에 열람을 위한 보안 정보 입력 시에만 확인 가능(열람 직원 정보, 열람 이유를 데이터에 기록하여 철저한 개인 정보 보완)

– 안심 주소 발급을 통해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주소–실거주지가 불일치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양지화하여 국가의 국민 사회보장 강화, 국가 안전망 확대, 국민 복지 만족도 제고**

▶ **「주민등록법」 개정**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02

현재는..

▶ **최근 여성 대상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사건 등 중대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과 공포 고조**

– 수사 또는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 여성의 실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사례 발생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 연립·다세대·다가구에 거주 중인 1인 가구 신청시, 담벼락 가스 배관 등에 침입 감지 센서 부착 지원

▶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 전국 곳곳에 설치된 CCTV 노후화 심각, 고화질 CCTV로 조속히 교체

– 통합관제센터 설치 ·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CCTV 체계적 관리,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 강화

–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동행벨' 설치로 안전한 귀갓길 확보

띵동! 주문합니다!

▶ **지능형 관제 체제 구축**

– CCTV 영상정보를 재난 예방에 선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 법령 정비, 영상 공유 체계 확대

▶ **AI기반 맞춤형 CCTV 확대 설치**

– 취약계층 주거시설·범죄 위험 도로 등 집중 설치하여 위해 요소 사전 감시 및 발생 시 신속 대응 체제 구축

▶ **자율방범대 활용 골목 안전 개선**

– 폐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에 제공하여 골목 안전 개선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추진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새로운 기술과 시설들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신종 위험재난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재난안전관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인력에 의존하여 효과적 재난관리에 한계**
- **인공지능, 빅데이터, 위험감지 센서, 사물인터넷 등 4차혁명 기술 발전은 보다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의 기반을 제공**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현장조치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 ICT 기술(AI·빅데이터·IOT·위험감지센서·지능형 CCTV 등)과 전자지도를 활용한 선제적 재난예측 및 감지
  - 재난 임박시나 발생시 재난대응기관의 즉각적인 재난 대비·대응을 지원하여 초기 대응 능력 강화
- **재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대응 시스템 개선**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등 소지자를 재난업무에 중점 배치
  - 도로·철도·에너지·수자원 등 핵심 기반시설 운영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직렬 신설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04

현재는..

-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건수는 509건(연평균 51건, 피해액 1,387억원)으로 매년 지속적 발생, 중소상인의 생존을 위협**
- **노후 전기시설에 의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 화재 원인의 46%를 차지하나 재정부족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진행 미흡**
  - * 전통시장법에 의한 전기안전등급 : C급(주의) 433개, D급(경고) 50개, E급(위험) 12개
  - * (D등급) 즉시 개 · 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등급)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 · 보수와 사용제한이 필요한 상태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전기시설 정비 지원 및 아케이드 등 시설물 안전성 강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화재 보험 공제 사업 추진**
- **자율소방대 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예방 강화**

재난 안전·소방산업 육성으로 국민 안전을 높이고 국가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05

현재는..

▶ **재난안전산업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위험감지센서 등 4차산업 혁명기술과 접목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며, 세계시장의 규모나 성장성(연평균 5.88%)이 매우 큰 산업**

– 영세한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적 시장형성이 곤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육성 필요

▶ **소방산업 역시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 등에 국제구조대에 파견하여 우수한 역량과 장비로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수행하며 K소방에 대한 위상과 기대가 높음**

– 현재 국내 소방산업체의 90.8%가 매출액 50억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해외 수출 등에 경험과 경쟁력이 낮아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이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재난 안전 및 소방 산업을 전략산업 직종으로 지정 추진**

– 타 공종(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14개 분야)과 같이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안정적 현장기술인력 확보

▶ **재난 안전 및 소방산업 국내 수요 기반 확대 및 해외진출 강화**

–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및 제품 인증 활성화, 공공구매 지원 등 사용 촉진

– 다양한 해외 전시회에 국내 재난 안전 및 소방산업체가 참여, 제품 홍보 및 구매 상담 등 계약 추진 지원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0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 자유평화 한반도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겠습니다.
- 북한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주도하겠습니다.
- 해외여행자 및 체류자 안전보호 책임지겠습니다.
- 지구촌 재외동포와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겠습니다

01

현재는..

▶ **성숙한 자유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 속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역할 증대**

– 보편적인 가치와 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목표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대폭 확충을 바탕으로 과거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인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서는 외교 강구

▶ **국가 간 경쟁과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면밀히 대응하고 우리 주도의 대외환경 조성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책무 충실히 이행**

–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평화·안보·여성·기후변화·사이버 등 글로벌 아젠다 주도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협력 강화

▶ **'UN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협상회의 개최**

– 환경 악화시키는 플라스틱 오염 예방과 감소를 목표로 세계 각 국가별 행동계획 촉진하는 국제협약 체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번영과 발전에 기여

▶ **ODA(공적개발원조) 증대**

– 기후변화,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ODA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

▶ **스마트 글로벌 맞춤형 외교 추진**

– 우리의 평화,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올바른 역사인식 속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추구하고, 중국과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을 원칙으로 성숙한 양국관계 발전 도모

– 유럽연합,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외교방향 강구

▶ **경제안보 및 세일즈 외교 강화**

– 공급망, 수출통제,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익 보호에 신속히 대처

–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확충하여 안정적 공급망 구축

– 원전, 방산,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수주 지원

북한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주도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와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인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물질 축적을 지속하면서 ICBM 등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 감행**

▶ **2024년 1월부터 한국이 2년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비핵화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 주도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추진**

–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북한이 핵개발 단념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 국제사회의 확고한 북한비핵화 의지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 **대북 억제력 지속적으로 강화**

– 한미동맹 바탕으로 대북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진전

해외여행자 및 체류자 안전보호 책임지겠습니다

03

현재는..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해외 출국자 수가 늘어나면서 해외 사건사고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해외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사건, 사고 발생시 현장을 찾아가는 신속한 영사서비스 제공으로 재외국민 안전보호 대책에 만전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재외국민 안전보호 대책 강화 및 신속 대처**
- **해외안전여행 정보 제공 강화**
  -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연루 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차원의 해외안전여행 정보 홍보
-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
  -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 긴급 대응을 보조하는 영사협력원 등 인력 확충
- **영사 서비스 업그레이드**
  -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적 서비스 제공
  - 각종 서류 발급 목적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디지털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지구촌 재외동포와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전 세계 퍼져있는 재외동포와 다양한 교류 및 지원의 중요성 증대
- 국민의힘 대선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한 만큼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 본격 모색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 재외동포 한국어, 국사, 문화, 교육 지원 확대
  - 재외동포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재외동포와 모국간 동반 성장을 목표로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 **동포사회 실질적 지원 강화**
  - 한민족 문화예술인·언론단체·입양인·기업·경제단체 등 지원
- **한글학교 역량 강화**
  - 한글학교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사 사기 진작
  - 한글학교 교사 대상으로 현지 및 모국 연수 확대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배양
  - 학습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양질의 통합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으로 교육효과 제고
-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초청 연수**
  -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대상으로 한국 문화체험 기회 제공하여 한국 발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높이고 자긍심 고취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자유평화 한반도

- 북한이탈주민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이산 및 납북자 가족 고통의 목소리, 국가가 위로하고 응답하겠습니다.
- 헌법가치에 충실하게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
-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경우 기업 유인 제도가 거의 없어 일자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탈북 과정 등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 사회 적응에 어려움 호소**
-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핵실험으로 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들의 피폭 가능성과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으나 전문기관 및 조사인력이 부족한 실정**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개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 하나원 직업훈련 심화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
  - 재북·재남 경력 활용을 통한 분야별 전문직 자격취득 과정 지원강화
- **멘토링 지원 및 정착 성공사례 확산**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 **지방 및 농·어촌 거주 탈북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실시**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전담 전문심리치료기관 확대**

– 하나원–하나재단–전문심리치료기관 협업, 하나원 교육단계부터 거주지 전입 이후에도 필요한 심리정서안정 프로그램 적시 제공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피폭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피폭 및 염색체 이상 검사, 전문인력 증원 및 인프라 확충

– 향후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하나원 단계에서 피폭 검사 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향후 영변 핵단지 및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까지 검사 확대 추진

– 피폭검사에서 최소검출한계 이상의 결과가 도출 시 개인의 건강상태 맞춤형으로 구성한 건강검진을 매년 제공, 추적조사 지속 실시

▶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등 기업지원 강화**

이산 및 납북자 가족 고통의 목소리, 국가가 위로하고 응답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1세대 이산가족 고령화 심화**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지원에 본격 착수한 만큼, 지속적 관심과 지원 필요**

* 윤석열 정부, 최초의 납북자 문제 전담 조직 출범(2023년 9월 8일)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경주**

– 이산가족 상봉 촉구 등 북한의 태도 변화 견인

–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 **이산가족 고령화에 맞춘 교류기반 강화**

–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4차 조사 조기 실시

– 해외 이산가족까지 실태조사 확대

– 이산가족 2 ~ 3세대 유전자 검사 지원

– 이산가족 생애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이산가족의 날'(매년 음력 8월 13일) 기념행사 연례 개최

▶ **귀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가족 실질적 지원**

– 이산가족·국군포로·희생장병 메모리얼 센터 건립

– 임플란트 등 의료·생계보장 확대, 마음치료, 사회복지사 서비스 모니터링

– 상징사업 및 국내외 전시 기획사업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한 공감대 확산

헌법가치에 충실하게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통일은 미래 대한민국의 큰 기회이나, 통일에 대한 기대는 감소**

* 국민의 73% "통일 필요"(2022년 통일부 조사), 국민의 63% "통일 실현불가능" (2022년 KINU 조사)

▶ **북한은 △우리를 교전국으로 규정 △통일불가 주장 등 대남 흔들기 노골화**

– 북한의 심리전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변화를 촉진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능동적 통일준비'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미래 청사진 제시 및 이를 위한 통일준비 본격 추진**

– 헌법 제3조에 기반한 우리의 일관된 통일원칙 'One Korea Principle' 공론화

– 4차 산업혁명, 인구변화 등 미래이슈와 결합한 통일담론을 통해 국민의 삶 개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미래세대 통일교육**

– 북한·통일정보 허브 국립통일자료센터 건립 추진

– 방방곡곡 찾아가 현장에서 만나는 통일문화 행사 개최

– 통일교육주간 운영, 청소년에게 통일안보 체험학습 인프라 확충

띵동! 주문합니다!

▶ **국내외적 통일논의 확산과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외교 추진**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의 국제적 지지 확산 본격 추진 및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최초 실시

– K-컬처를 토대로 세계 각지 동포사회와의 통일문화 네트워크 형성

▶ **헌법 제4조 구현 위해 범정부차원의 통일 준비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견지**

– 북한이 우리 제안에 호응해 나올 때를 대비하여 이행계획 구체화

▶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

–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조치

▶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

–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정히 집행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윤석열 정부, 인류 보편가치로서의 북한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

– 정부 최초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약칭) 북한인권 로드맵)' 수립을 통해 북한인권 정책 정립

▶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째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

▶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추진**

▶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핵심 허브, 국내외 인권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 **정부 공식 북한인권보고서 연례 발간 등 북한인권 실상 공감대 확산**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으로 국제사회 논의 주도

– UN 북한인권 논의와 연계해 '북한인권 국제대화' 정례화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정책주문 · 배송프로젝트

09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기후미래
녹색생활

- 기후위기 대응 강화
- 저탄소 전환 촉진
-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지원
-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기후위기 대응 강화

-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합니다.
- 기후위기로 인한 무더위와 한파로부터 지켜드리겠습니다.
-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합니다

01

현재는..

-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온실가스 감축, 무탄소 에너지 전환, 기후산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에는 부족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성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도 포함**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가 정부 내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부처간 조정력 미흡**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기후대응기금 확충(2024년 2.4조원 → 2027년 5조원) 로드맵 마련**
  -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 조정 등 전입금 확대
  - 배출권 가격 안정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상 유상할당 확대
- **기후대응기금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
- **기금사업 효과성 평가기준을 마련, 주기적 평가 및 사업조정**
-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기능 강화**
  - 탄소중립 기본계획·정책 이행을 뒷받침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 절차 신설 등
-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방안 논의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기후위기로 인한 무더위와 한파로부터 지켜드리겠습니다

02

현재는..

- **무더위, 한파는 노인, 어린이, 기초생활 수급자, 옥외근로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큰 영향**
  - 하절기, 동절기 냉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도 증가 추세
- **기후위기 취약계층 주거, 활동공간에 대한 적응 인프라가 부족**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인프라 지원 확대**
  - 건물녹화, 마을정원 등 녹색공간 조성. 야외근로자 쉼터, 경로당 주변 등 결빙취약지역 열선 설치, 전통재래시장 그늘막·쿨링포그 설치, 차열페인트 도장
  -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성 및 밀집지역 등 파악해 적재적소에 적응 인프라 구축
- **도시형, 농어촌형, 복합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맞춤형 적응모델 발굴 및 확산**
  - 냉난방설비를 갖춘 농촌형 간이쉼터 설치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모델 마련
  -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기후위기 적응모델 체계적으로 도입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세계기상기구는 향후 5년 내에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넘어설 확률이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로 대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특이기상현상이 빈발하는 등 날씨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기후재난 피해와 복구비는 증가**
- **향후 10년의 농업, 에너지 등 분야별 기후변화 완화·적응 정책 기후위기 대응 성패를 좌우**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강한 호우 등 위험기상 예상 시 재해현장 주민에게 재난문자로 긴급 기상정보 전달**
- **살얼음, 안개 등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기상서비스 강화**
- **한반도 및 주변해역 실황감시를 위해 지상관측망 해상도를 높이고 기상관측선 추가 도입**
- **한반도·동아시아 기후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지구시스템 기후예측모형 개발 및 근미래(1 ~ 10년) 이상기후 조기 탐지·경보 시스템 구축**
  - AI기반 기후정보 생산기술 등 초고도 기후 기술을 활용한 기후정보 제공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저탄소 전환 촉진

-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합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

01

현재는..

▶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발전) 부문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5.9%를 삭감하여야 하나, 무탄소 에너지 비중이 낮은 현실**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

- 혁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력시장 개편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보상, 이익공유 등 기준 마련
-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국제표준화하고, 무탄소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 지원

▶ **수소생태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 그린수소 해외 투자 확대,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마련 등 수소공급망 확보
- 물류·항만 등 지역에 청정수소 클러스터 · 수소도시 조성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
-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수요 확충 및 산업 지원

▶ **수열, 조력 등 미활용에너지 적극 활용**

- 소양강, 대청, 충주 등 댐 주변에 수열클러스터 조성
- 시화조력 증설, 새만금 조력 타당성 검토 등 조력에너지를 수요기업에 지원
- 유기성폐자원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대
- 발전용 온배수를 활용하는 해수담수화 시설 허용으로 여수·대산·포항 등에 공업용수 공급

▶ **「해상풍력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합니다 02

현재는..

-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제 탄소무역 장벽 강화
- 2023년 7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배출량의 약 74% 관리하나, 배출권 가격하락 등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에 한계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
  - 제4기 계획기간(2026년 ~ 2030년) 산업별 감축목표를 국가감축목표 상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
  - 부문·업종별 차등적으로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
-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 기업의 탄소저감 유인**
  -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
  -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ETN, ETF 등) 출시 허용
-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
  -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지원
-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개발 등 재정지원 확대**
  - 업체별 지원한도 단계적 확대 및 지원 대상 확대
- **중소·중견기업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중소 · 중견기업 제품의 CBAM 탄소배출량 보고서 작성 지원
  - 주요 원료(전구물질) 조사,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산정 및 탄소 DB 구축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지원

- 기후산업을 키워 지역경제도 일으킵니다.
- 녹색금융으로 기후산업이 일어나고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기후산업을 키워 지역경제도 일으킵니다

01

현재는..

▶ **2030년까지 기후산업이 12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기후테크산업 육성 추진**

▶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 육성 추진**

– 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과 실증 특례, 투자 등 사업화 연계, 디지털 그린테크, 스마트 농업 등 기후테크 산업 지원

– 기후테크 원스톱 창업지원 통합플랫폼 개설

▶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추진**

– 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송, 건물 등 분야 디지털 전환

– 데이터센터 및 통신망을 저전력화하는 탄소저감 기술 개발·실증

–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플랫폼 기술개발 등

▶ **CCUS 산업 활성화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 CCUS 클러스터 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투자 지원, CCU 감축량 산정 및 인증방법론 개발

–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특례 부여 등

녹색금융으로 기후산업이 일어나고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02

현재는..

- 녹색채권과 증권은 다년간에 걸쳐 투자자에게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단기적 지원은 효과 미흡
-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해도 자본과 경험이 부족하여 초기 민간투자를 받기 어렵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해외 진출에 애로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녹색분류체계 기반 한국형 녹색채권 지원 금리 인상 및 기업당 지원 한도 확대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 비용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추가 자금조달 지원
- 민관합동 녹색투자 펀드 조성
  -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미래산업육성펀드 조성
  - 중소·중견을 위한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신규 조성
- 산업은행 탄소중립 정책금융 확대(기후대응기금 출자 확대)
- 녹색여신 방법론 개발 및 녹색분류체계 기반 시범사업 실시
- 기후산업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 위한 녹색금융 로드맵 마련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 탄소리워드를 확대하여 동료시민과 함께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합니다.
-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화재예방 충전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를 일으킵니다.
- 전생애 기후 환경 교육으로 기후 위기 제대로 알고 대응하겠습니다.



🔔 띵동! 주문합니다!

탄소리워드를 확대하여 동료시민과 함께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합니다

01

현재는..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 및 참여율 급증**
- **높은 관심에 비해 탄소리워드가 낮은 실정이고 사용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접근 어려움 등으로 아는 사람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확대(연간 최대 7만원 → 최대 50만원)**
- **녹색 생활 실천 항목별 포인트 금액 조정 및 항목 추가**
  - 텀블러 이용, 배달 다회용기 이용, 재활용품 배출 등 단가 조정
  - 다회용기 등 10개 항목 외에 자전거 이용, 음식물폐기물 감량 등 추가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 녹색생활, 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별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시스템을 개선, 간편 로그인이 가능한 탄소중립포인트제 통합 모바일 앱으로 전환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적립 포인트를 현금성 포인트(현금계좌지급, 카드포인트, 온라인페이) 외에도 기부 가능한 옵션 추가**
  - 기부한 금액은 기후취약계층에 쓰이도록 설계하고 연말정산 기부금 항목에 반영
- **관계부처,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탄소중립 통합 리워드 앱 구축**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하고, 화재예방 충전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고금리 장기화, 비싼 가격 등으로 무공해차 수요위축 심화**

▶ **고속도로 휴게소 등 충전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아파트 등에서 충전 중 화재 발생 우려**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도 무공해차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

–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실구매 대폭 인하

– 경제적 취약계층이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국비 지원(기본보조금의 20%, 자동차 최초 구매 청년은 30%)

– (택시업) 250만원 추가 지원, (택배업) 기본보조금의 10% 추가 지원

▶ **보조금 체계 개편하여 고성능 무공해차 보급 촉진**

–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 및 친환경적 배터리 장착 차량 집중 지원

띵동! 주문합니다!

▶ **화재예방 전기차 충전시설 완비**

– 주거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 완속 충전기,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 급속충전기 집중 설치

–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곳에 이동형 등 신유형 충전기를 운영하고, 노후변압기 교체 우선지원

– 화재 위험이 있는 완속충전기를 전량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설치(2027년까지 50만기)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미세먼지 없는 수소 상용차량 보급 확대**

– 수소버스·수소트럭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간이 짧은 액화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 **「전기안전법」 개정**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를 일으킵니다

03

현재는..

-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은 국가로 폐플라스틱이 매년 1,200만톤 발생
- 재활용 가능 자원이 포함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도 증가하는 추세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고려하여 소각·매립량 최소화 시급
- UN은 2024년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며, 2024년 말 부산에서 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협상회의 개최 예정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 PET병, 일회용 배달용기 경량화 의무화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축
  - 2027년까지 음식점, 카페 등 총 3만개소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사용량을 단계적 확대
- **생활폐기물 중 폐비닐 전문선별시설 설치 확대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적극 회수**
- **폐자원 순환경제망 구축**
  - 구미(반도체), 해남(태양광 폐패널), 부산·울산(플라스틱), 보령(바이오) 등에 품목별 자원순환 거점 클러스터 조성해 입주기업 지원
  - 폐플라스틱 석유·화학연료화 촉진을 위해 열분해시설 확충
  - 폐전자제품, 폐배터리 등 주요 폐자원의 공급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전생애 기후 환경 교육으로 기후 위기 제대로 알고 대응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청소년은 기후변화 문제인식에 비해 이해도와 관심도는 낮은 상황**
  - 유아–초중고–대학 등 전과정 기후 환경 교육 강화로 기후 위기 이해 증진
- **MZ세대는 기후변화를 우려하고 기후행동에 적극적이며 기업의 역할 기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시도별로 놀이와 체험형 학습을 병행하는 유아환경교육관 설치**
- **학생, 교사 등이 기후정보 공유, 온라인 연수 및 기후·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기후동행 플랫폼 구축**
- **기업과 인턴십을 연계하는 대학 그린리더십 인증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양성 시 기후환경강좌 개설 지원**
- **국립 기후변화홍보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여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탄소중립 체험 확산**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모두 함께 동행

- 아동·청소년
- 청년
- 여성
-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 장애인
- 군인
- 제복공무원
- 사회적 약자
- 1인가구
- 반려동물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아동·청소년

-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 미래의 희망 어린이에게 안전한 등굣길을 배달합니다.
- 발달지연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01

현재는..

▶ **각종 범죄의 타깃이 되거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체계적·실질적 지원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학교밖 청소년 및 가정밖 청소년 실태파악 및 자립지원 확대**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위기 청소년 파악
– 학교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상담·멘토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 강화

▶ **고립·은둔 청년 지원**

– 고립 · 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적응을 위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청년미래센터 전국으로 확대
– 은둔형외톨이의 정신적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사회복귀 치료 등을 위한 전문 연구
– 「(가칭) 은둔형외톨이지원법」과 같은 별도 특별법 제정 혹은 여성, 청소년, 복지관련 유사법률에 지원 관련 조항 신설

▶ **아동·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 부담 해소**

–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정기적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돌봄청년 방문간호' 실시
– 돌봄·가사·병원·식사·영양관리 등 일상돌봄 바우처사업과 연계
–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미래의 희망 어린이에게 안전한 등굣길을 배달합니다

02

현재는..

▶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8 ~ 9천건(사망 20여건) 발생,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어린이 안전 투자 감소 등 학부모들의 불만 증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안전한 통학로 조성**

– 지능형 CCTV설치, 지능형 아동식별 센서, AI기반 교차로 등 첨단 안전 장비 설치,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방호울타리 설치 및 성능 개선

* (AI기반 교차로) 보행자·차량 위치 예측 및 사고 위험 알림, 보행신호 자동 연장 기능 등

* (시인성 강화) 옐로카펫 및 노란 횡단보도 설치 등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 (방호울타리 성능) 급경사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sb4급 이상의 울타리 설치 등

▶ **통학로 확대**

– 차로 축소 및 일방 통행도로 지정 확대, 학교 담장 허물기를 통한 통학로 확대, 등·하교시 화물차량 진입 제한 등

▶ **어린이 안전지킴이 배치 확대**

– 퇴직 경찰관·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 어린이 안전 지도·단속권을 부여하여 학교주변 상시 안전 순찰 강화

▶ **어린이 안전 예산 대폭 확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발달지연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자란 아이들의 언어 지연 및 사회성 문제 발생 빈도 증가로 발달지연 아동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필요

▶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 작성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중이나 지원 부족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고, 자격제도 정비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 중 하나인 영유아발달지원 대상기준 확대**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청년

-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 청년 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미래세대의 문화 생활을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사용자(게이머·팬) 친화적 게임 및 e-스포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청년들의 세계를 향한 도전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들에 대한 '인턴 희망고문'을 근절하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허위 채용 광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결혼에 부담이 되는 혼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신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예비 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01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현재는..

▶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시설에 사회 첫걸음을 자신 있게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 확대 및 자립준비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특화모델 가점 부여 및 물량 확대 등)
- 자립준비청년 임시거처 지원 근거 마련

▶ **자립준비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활성화(1:10명)**
- 경계성 자립준비청년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대

▶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

▶ **심리지원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 확대**

▶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호시설 간 정보시스템 구축**

▶ **「(가칭)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 **시설 퇴소 5년 후 상황·욕구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마련**

청년 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청년들의 학자금, 주거비, 식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 필요**
–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등 부담 심각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추진**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범위 확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기숙사 확충 및 결제방식 개선 추진**
– 국·공유지와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대학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
– 기숙사비 현금분할 납부 및 카드납부 활성화

▶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미래세대의 문화 생활을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청년 세대의 문화 관람 의향 높으나, 청년 다수가 안정적 소득이 없어 문화 향유 기회 부족**

▶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부족으로 지방 주요 거점 도시의 인구 유출 심화**

▶ **소득 격차가 유·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의 격차로 연계**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만19세 → 만24세까지 단계적 확대**

▶ **취약계층 유·청소년(만5세 ~ 만18세)에게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신설**

▶ **국립예술단체 청년 예술인 발굴·지원 확대**
– 신진·청년 예술인들에게 심층적 교육, 현장 중심의 외연 확대 기회 제공
– 국립예술단체는 향후 차세대 주자 발굴·양성 기반 조성

사용자(게이머·팬) 친화적 게임 및 e스포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04

현재는..

▶ **게임과 e스포츠는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유망 산업이자 남녀노소 즐기는 보편적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음**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불법 게임 핵 없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 게임 핵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마련
- 게임 핵 탐지하는 '안티 치팅 프로그램' 개발 지원

▶ **e스포츠 활성화**
- 국내 게임 기반 e스포츠 활성화
-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 지원
- 지역 균형 e스포츠 향유 여건 구축

▶ **게임·e스포츠 제도권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청년들의 세계를 향한 도전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05

현재는..

▶ **해외 유수 기관에서 연수하거나 UN 국제기구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참여기회 제공**

▶ **해외봉사단 청년연수 참가자 선발시 다문화 청년 등 사회적 배려자 대상에게 참여기회 확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청년들의 해외 연수 기회 확대**
- 해외 싱크탱크 및 기관에서 인턴십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 챌린저' 사업 대상 국가 및 기관을 확대하고 기후변화(환경), AI(첨단기술) 등 대상 분야 확장

▶ **청년들의 국제회의 참여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 'UN 청년과 군축회의'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G20 Youth Summit' 대표선발 과정에서 교육 · 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통해 참여자 역량 강화

▶ **다문화 청년 등에게 국제교류 참여기회 확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 선발시 다문화 청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산점 제고

청년들에 대한 '인턴 희망고문'을 근절하겠습니다

06

현재는..

▶ **현재 채용시장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 광범위하게 활용**

–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취업에 절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제도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어 정규직으로의 채용 전환이 극히 저조하고 불투명하여 취업준비생들의 열정과 노력, 시간만 빼앗은 희망고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청년들의 피해 빈발

▶ **인턴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인턴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보급·작성 행정지도**

– 정규직 전환율 등 주요 조건 사전 고지 및 서면계약서 작성

– 인턴 종료시 평가기준과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

▶ **정확한 근무기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장기 인턴,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을 금지**

▶ **회사의 계약 위반*, 부당한 계약해지**시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통한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준수 근로감독 및 행정지도

**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지정, 부당한 정규직 전환 거부(계약해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노동위원회 신청)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07

현재는..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히 사회초년생들인 청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

▶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년 등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 자발적 개선 지원**

– (조사·행정지도)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괴롭힘 신고시 정부행정지도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지원을 병행하여 문제를 해결

– (회복·치유지원) 민간전문가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피해 청년들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심리치유와 회복프로그램도 지원

▶ **정부·지자체·사업주단체가 소규모사업장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우수기업을 포상 및 지원*하여 건강한 직장문화를 확산**

* 정부 지원 근로자 휴가비 우선 지원 등

허위 채용 광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08

현재는..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에 절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등 허위 채용 광고를 통해 취업을 유인한 후, 실제로는 계약직 채용 등으로 근로조건이 달라 청년 등의 피해 빈발**

– 그러나 「채용절차법」은 모집공고, 면접, 채용 등 채용절차 전반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 **「직업안정법」상의 허위 채용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을 울리는 허위 채용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직업안정법」에 따라 허위 채용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

*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허위 채용광고 사례*별로 법 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정규직 채용공고 후 기간제로 계약하거나 수습 막바지에 부당한 기간연장 후 해고 등

▶ **온라인 허위채용 신고센터 운영, 청년·사업주 등 대국민 홍보로 허위 채용광고 방지 추진**

결혼에 부담이 되는 혼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09

현재는..

▶ **MZ세대의 비혼주의, 결혼은 선택이란 풍조 속에 결혼비용 부담 가중**

–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 결혼 준비 젊은이들을 주저하게 하는 현실

▶ **결혼이 적어 저출생까지 연동,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꺼리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맞춤형 지원 필요**

– 현행 주택 중심에서 예식장·가구·가전제품 등 주요 혼수품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결혼 예비부부의 예식 비용, 가구,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 가구당 최대 2백만원 지원
–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대상에 '혼인 가구' 신규 포함

▶ **친환경차 구입 시, 신혼부부 특별 공제(연말정산 환급)**

▶ **「소득세법」 개정**

청년·신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

현재는..

▶ **청년층의 자가보유 희망 의사는 계속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들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

– 세대 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거 불안이 결혼과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 새롭게 도입된 도심복합개발 모델을 적용해 융복합 콤팩트시티로 건설 추진

– GTX 역세권 도심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추진

▶ **도심 철도지하화 주변 부지 및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공급

▶ **지방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맞춤형 생활공간과 주택공급 확대**

– 광역권별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연계 지정하여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 조성 추진

▶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

– 현행 만 19 ~ 34세의 가입 요건을 만 39세까지 단계적 확대

▶ **예비부부 및 혼인 1년 내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대폭 완화**

– 디딤돌(구입자금) 부부합산 소득기준 : 8천5백만원 → 1억 2천만 원

–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기준 : 7천5백만원 → 1억 원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예비 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1

공약공모전 최우수상

현재는..

▶ **결혼을 준비하면서 스·드·메를 포함한 예식 비용에서 현금결제나 특정업체 강요, 서비스 불이행, 과도한 추가비용 요구 등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예비 부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불합리한 예식 비용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 도입

*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 포함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추진

– 웨딩패키지 계약 세부가격 공개 추진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여성

- 생애주기별 여성의 3대 질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미혼여성에게도 난자 동결시술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생애주기별 여성의 3대 질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01

현재는..

▶ **가임기, 월경기, 폐경기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3대 질환에 대한 비용 부담에 따른 정책적 지원 필요**

– 가임기 여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원 강화, 월경기 여성에 대한 유방암 등 신약 보험 적용 확대, 폐경기 여성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 지원·검진 등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골다공증 치료제 지원, 검진 확대**

–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 및 골감소증 환자까지 급여 대상 확대
– 골다공증 무료 국가건강검진을 2회 → 4회로 확대 검토
– 골밀도 검사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전국 보건소 골밀도 무료검진 등 상시 검진체계를 확립

▶ **유방암 등 여성 중증질환 지원 확대**

– 2차 이상의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표적치료제 혁신 신약의 신속한 급여 확대 추진

▶ **난임 시술 지원 강화**

–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칸막이 폐지 및 급여 횟수 확대 검토
–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전액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

미혼여성에게도 난자 동결시술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02
공약공모전
우수상

현재는..

▶ **기혼 여성에 국한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으로 인하여 임신과 커리어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음**

–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산에 도움이 되는 냉동 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혼여성에게는 냉동 시술 지원이 없어 부담
(회당 2백만원 ~ 3백만원)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난자동결을 원하는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난자동결 비용 지원(사전검사 비용포함)**

– 보조생식술(인공수정·체외수정) 횟수 및 비용 현실화 추진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한부모가정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자녀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위기임산부가 신분 노출 우려, 양육 부담, 부정적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해 출산·양육을 포기하거나 아동 유기를 하지 않도록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지원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위기임산부 조기발견 및 맞춤형 지원**

– 상담전화(가칭 1308) 핫라인 구축 및 청소년 전화(1388)과 연계·운영
–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확대 및 민 · 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

–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폐지
–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상향 및 24세까지 단계적 확대

▶ **보호출산제 정착 위한 지원 강화**

– 보호출산을 선택한 산모가 원하는 경우에 미혼모시설을 이용토록 관련 제도 정비
–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 및 보호비용 지원

한부모가정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자녀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낮아 사각지대 발생**

▶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시행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성 제고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 후추징**

–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양육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악질적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징
– 법적 양육비를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신상공개

▶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를 통한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에 따른 (전문)인력 및 조직 정비
–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상향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장애인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함께 누리는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장애인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가족돌봄 부담 심화**

* 하루 평균 돌봄시간: 최중증 10.4시간(의사소통 최중증의 25.7%, 16시간), 비최중증 4.1시간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 **중앙·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담인력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 **의료서비스 및 행동문제(자·타해) 치료 지원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를 통한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 및 편의성 보장**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족급여 한시허용 개선**

함께 누리는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국내에는 시각장애인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운영하는 청각 장애 도우미견, 지체 장애 도우미견, 시각장애인안내견 교육 훈련 시설 운영 중**

- **시각장애인안내견학교 및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청각 장애 도우미견, 지체 장애 도우미견, 시각 장애인 안내견 교육 훈련 시설 운영 중이나,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해 훈련의 다양성 등 부족한 상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보조견 훈련학교 확대 및 다양한 도우미견 훈련 보급**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조견 종류를 구분 및 지원체계 정립
  - 사회 전반 장애에 대한 도우미견 지원제도 확대
  - 은퇴견 사후지원제도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03

현재는..

- **장애인을 위한 방송(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및 자막 방송)이 송출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청각 장애인은 TV 시청에 어려움을 겪음**
  - 최근 방송사 뿐만 아니라 OTT를 통한 시청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확대**

- **방송사와 OTT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 장애인이 원하는 프로그램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 강구
    * (현재) 방송사가 신청한 프로그램을 지원 → (향후) 장애인 수요조사에 기반한 지원
  - 방송사의 음성–자막–수어 간 변환시스템 고도화 지원

-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검토**
  -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 방송사에 대한 지원도 위와 연계하여 확대

장애인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영화관 등의 장애인 관람석이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관람석 없거나 구조상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운 상영관이 있는 등 지체 장애인의 영화 관람 불가 상황 발생**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이 적용된 영화 상영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시·청각 장애인들의 관람 환경 개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지체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 강화**

– 영화관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 → 상영관별 좌석 1% 이상

– 휠체어 좌석이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에 설치되는 등 현행 규정에 부적합 사례에 대해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독 강화

▶ **시·청각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영화 관람 편의 서비스 개선**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이 적용된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확대

– 비장애인 관람객과의 동시 관람을 위한 폐쇄형 동시 관람 장비 도입 지원 확대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지도·감독 강화**

– 관람석 등의 적정설치율을 높이고 부적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강화

–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표본조사 실시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군인

-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생활밀착형 복지지원 확대로 군 장병과 군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겠습니다.
- 참전명예수당의 실효성을 높여 영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01

현재는..

- 안전담당부서가 육해공 등 각 군별로 산재해 운영 중이며 국방 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
- 민간병원에 위탁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는 장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매년 평균 60명의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
- 일부 지자체별로 군인 상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 안전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 안전 대책 수립
  - 군의 특수성에 맞춘 안전진단 및 안전관련 업무 전담
  - 안전사고 발생시 연계된 의료기관(군병원, 보훈병원 등)과 신속대응체계 구축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지방자치단체별 산발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생활밀착형 복지지원 확대로 군 장병과 군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군 급식 관련해서 병역자원감소, 조리병 비선호 현상, 짧은 복무기간 등으로 인한 낮은 조리숙련도 문제 등으로 급식 수준이 저하
- 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 대해 군인에 지원되는 이사화물비는 2021년이후로 동결되어 물가상승 등으로 군인 부담 증가
- 인구감소로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군 업무의 공백 등 비전투 분야의 민간 인력 대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 군인 신분이 아닌 상황으로 주거지원이나 수당 등에서 복지혜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 지원
- 군무원 근무 수당 인상 및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시설(관사 또는 간부숙소) 지원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불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국가배상법」 개정

참전명예수당의 실효성을 높여 영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04

현재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 등이 소득액 인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보훈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발생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액 산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제복공무원

• 제복 공무원의 긍지와 명예를 배달합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제복 공무원의 긍지와 명예를 배달합니다

01

현재는..

▶ **최근 문경 화재로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 발생**

–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55명의 소방관이 순직

– 하지만 소방관의 후생 복지 등 처우는 장기간 동결되고 있어 헌신에 걸맞게 개선 필요

▶ **경찰관 역시 현장 근무 중 주취자에 의한 폭력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공권력 강화 필요성 절박**

▶ **교정 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복 공무원이나 국민들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아 업무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 발생**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 제정을 통해 소방활동으로 인한 소방관 개인 손실 보상 책임 방지 등

▶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 군과 동일 수준인 10년 이상 호국원, 20년 이상 현충원 안장으로 상향

▶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확대**

–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으로 교육 및 돌봄 부담 경감

▶ **제복공무원들의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상 및 처우개선 등

▶ **인력 증원과 임무수행 시 필요 장비에 투자 확대**

– 소방공무원 : 연기투시용 시야개선 장비, 화재진압 로봇, 로봇정찰개 등 개인 안전 보호 장비성능 개선과 첨단장비 지원 및 실화재 훈련시설 전국 확대
– 경찰공무원 : 인력 증원 추진, 사이버·마약범죄 등 전문인력 확보
– 교정공무원 : 정상 4부제 시행을 위한 운영인력 증원
– 해양경찰공무원 : 해양정보융합(MDA) 플랫폼 구축 추진 등

▶ **제복공무원들의 건강 의료지원 확대**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소방심신수련원 확대로 심리안정치료 지원 등
– 경찰공무원 : 비수도권 경찰병원 분원 건립

▶ **제복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

– 교정공무원 : 기형적 직급구조 개선으로 책임성 강화 및 사기 진작, 현충원 내 순직 교정공무원 충혼탑 건립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사회적 약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찾겠습니다.
- 폭력·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찾겠습니다

01

현재는..

- 복지 사각지대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기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 필요
- ICT 기술을 복지 현장에 접목해 복지 사각지대 위험 예측 및 발굴·지원 효율화를 도모하고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은 찾아가는 복지업무에 집중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도입**
  - 본인, 이웃, 신고의무자 등 신고정보를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급여·서비스 지원
- **위기 가구 초기 상담에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스템 활용 추진**

폭력·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02

현재는..

-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는 더 이상 여성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명칭 및 지원체계가 여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발생**
- **「스토킹방지법」 제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 이후에도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 및 피해지원 강화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여성' 피해자 지원 기능을 모든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
  - '여성긴급전화 1366' → '폭력긴급전화 1366' 등 명칭 변경 및 남녀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는 상담 인력 양성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 「스토킹방지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 관련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
  - 양육자 및 교사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및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확성 제고 및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개선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강화, 결과 및 조치사항 공개 철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03

현재는..

- **다문화가구 증가로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학령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및 차별 없는 학교생활 등의 요구 증가**
- **다문화 청소년이 가진 이중언어 능력과 문화 다양성 등 특성을 살려 이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 사회진출을 돕는 지원체계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청소년 교육 및 진로지도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한국어교육)
  - 다문화청소년 대상 상담 및 진로설계 지원 센터 확대
- **다문화청년 인재양성 및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글로벌시대 문화융합을 통한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1인가구

•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띵동! 주문합니다!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미래를 위협하는 '은둔·고립, 외로움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회' 극복 필요**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증가**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온가족 보듬사업 강화**
  - 1인가구 등 취약·위기 가족 대상 상담 및 사례관리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는 온가족보듬사업 활성화

- **50대 이상 중장년 고독사 대책 마련**
  - 전국 주거취약지역의 50세 이상 중·장년 대상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 인공지능 복지 스마트기술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하여 안부 확인 및 지원
  -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중·장년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일상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고독사 고립·은둔 가구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2024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

국민택배



반려동물

• 반려동물 정책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정책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01

현재는..

-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의 확대 필요성
- 반려동물 보험상품이 미흡하고 가입율은 낮아(2022년 0.9%) 반려동물 건강관리가 큰 부담
  * 반려인의 83%가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반려동물 월 양육비(15만원)의 40%가 병원비
- 반려동물 삶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보호자 · 입양자를 배려할 필요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 보험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맞춤형 상품개발, 전문보험회사 진입 허용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추진
-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등 진료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입양자,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추진
-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